국제개발협력

2006년 제4호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Ⅰ. ODA논단

1.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계획 ····· 7
박강호 _ KOICA 이사

2. 우리나라 국제교육 협력과 ODA ····· 11
이현훈 _ 강원대학교 아시아태평양리더십센터 소장 경제무역학부 교수
박의정 _ 강원대학교 아시아태평양리더십센터 사무국장

Ⅱ. KOICA 업데이트

1.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정책 방향" ····· 41
신장범 _ KOICA 총재
2.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시민 사회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 포럼 ····· 50
3. KOICA 대외무상원조 평가지침 ····· 59
4. KOICA 직원 타 원조기관 방문 결과보고 ····· 62
– 원조 현장 중심화 실행방안 (MPI 및 타 원조기관 방문 결과 보고) ····· 62
– JICA, UNOPS, UNV, Hellenic Aid, SDC 방문 결과 보고서 ····· 68

Ⅲ. 개발협력 동향

1. 국제기구
– '06년 OECD DAC 중견관리급회의(SLM) 및 개발 글로벌포럼 결과 ····· 75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 85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개발평가네트웍 회의 결과 ····· 89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그리스 검토회의 ····· 95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체코 특별검토회의 ····· 99
– DAC Guidelines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2005) 요약 ····· 101

2. 공여국
– 제 104회 월간 공여국 포럼 참가결과 보고 ····· 105
– 캄보디아 원조동향 보고 ····· 107
– 팔레스타인 지원 국제회의 결과 ····· 110
– 스리랑카 원조동향 보고 ('06. 9월) ····· 112
– 2006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 115

3. 발제문 및 선언문
1) Korea's New Role in the 21st Century(21세기 국제개발원조와 한국의 역할) ··· 125
마이클 로스코우 _ OECD 국제개발협력 국장
2) 한 아프리카 포럼 서울 선언문 ····· 137

I. ODA 논단

1.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계획

– 박강호 _ KOICA 이사

2. 우리나라 국제교육 협력과 ODA

– 이현훈 _ 강원대학교 아시아태평양리더십센터 소장 경제무역학부 교수

– 박의정 _ 강원대학교 아시아태평양리더십센터 사무국장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계획

박 강 호 / KOICA 이사

1. 도입배경

2000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천년개발선언이 채택되었고, 2001년 유엔 정상회의에서는 동 선언의 실천을 위한 총 8개 항의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다. 천년개발목표(MDGs)는 세계 빈곤의 절반을 감축하고, 에이즈 · 말라리아 · 기아 등 전염병의 획기적 퇴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국제사회는 획기적 재원의 조달이 없이는 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빈개도국의 빈곤 · 질병퇴치를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 논의를 통해 국제금융거래세, 항공권 연대기여금, 개도국에 대한 IMF 특별인출권(SDR) 추가배정, 무기거래세, 개도국 출신 이주자의 송금비용 인하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2005년 9월 유엔 천년개발목표 이행 점검 회의에서는 항공권연대기여금을 포함한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뉴욕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2005년 9월 유엔 특별정상회의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빈곤과 기아문제해결을 위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2006년 초부터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여러 방안 중 항공권 연대기여금 도입 필요성에 모든 부처가 공감하였으며, 구체적 도입방안을 검토해나갔다.

항공권 연대기여금(airline-ticket solidarity contribution)은 자국 출발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 동 기여금을 개발 원조 재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방안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혁신적 개발재원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온 항공권 연대기여금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기간 중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동 내용 중에 우리 정부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검토 계획을 포함시켰다.

기여금 부과의 대상이 국제선 항공권이 선택된 배경은 항공분야가 20세기 이후 줄곧 이루어진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며, 빈곤퇴치를 통한 국제정세 안정이라는 범세계적 목표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빈곤지속은 국제적인 정세 불안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항공여행 및 항공산업은 국제적 테러의 주된 목표가 되어 왔다.

2.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공적개발원조(ODA)를 증대시켜왔으나, 아직도 우리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해 ODA 규모가 많이 미흡하다. 2005년 국민소득을 기준으로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11위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민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규모는 선진국 평균치인 0.33%에 크게 못미치는 0.09%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1인당 연간 원조금액을 볼 때 선진국 평균은 121불이나 우리의 경우 15불에 불과하다. 이는 대외적으로 인색한 한국의 이미지 형성에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선진 원조공여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인류공동의 과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정부예산에 의한 ODA의 대폭적인 확대는 시간이 걸리고, 제약이 있으므로 전통적인 ODA 재원이 아닌 혁신적 개발재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ODA 확대와 인류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위해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도입은 필요하다.

부담금 부과가 항공수요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항공업계의 우려가 있으나, 이를 먼저 검토한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 등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여금의 액수가 항공권에 비해 극히 소액이어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도입추세를 보면, 프랑스는 2006.7.1부터 항공세의 일부로 동 기여금(프랑스발 국내선 및 유럽지역 항공편은 1유로, 국제선은 4유로 부과) 을 부과중이고, 영국, 칠레도 이미 조세형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밖에 브라질,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요르단, 콩고, 사이프러스, 코트디브와르,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니카라과 등 총 13개국이 항공권 연대기여금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3. 시행방안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국제선 출국항공권 1매당

1천원의 기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 · 외국인이 모두 적용되며(2세이하 아동 및 경유승객 제외), 부담금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다. 기여금은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빈곤과 질병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기여금은 우리의 외교적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하되, 필요시 일부를 유엔 등 빈곤 · 질병 퇴치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출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기여금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연간 약150-18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기여금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장관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여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징수된 기여금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 · 운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입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준비작업을 거쳐 2007년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한국국제협력단 개정법 시행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되며, 5년이후 계속실시 여부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4. UNITAID 참여

2006년 9월 프랑스, 브라질, 칠레, 노르웨이, 영국 등 항공권 연대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천년개발목표(MDGs)에 명시된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3대 질병퇴치를 위해 개도국에 양질의 의약품을 저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국제의약품 구매기금(UNITAID)를 창설 하였다. UNITAID는 WHO, Global Fund, UNICEF 등 기존 국제기구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의약품의 가격인하, 약품 및 진료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UNITAID의 운영 재원은 혁신적 개발재원, 특히 항공권 연대기여금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기여금과 전통적인 ODA 재원으로도 출연가능하다. 앞으로 모든 개도국은 UNITAID를 통해 결정된 유리한 가격으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유엔에서 개최된 UNITAID 창설 행사에서 UNITAID에 대한 참여 방침을 밝혔고, 11월말 제네바에서 개최된 UNITAID 제2차 집행이사회에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UNITAID 이사국은 우리나라 외에 프랑스, 브라질, 칠레, 노르웨이, 브라질, AU, NGO(2석), WHO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 중 일부를 UNITAID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UNITAID에 참여함으로써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의지를 나타내게 되고, 유엔천년개발목표의 제1목표(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및 제6목표(주요질병퇴치)에 적극 기여하는 인도주의적 국가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만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금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도입으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한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해 졌으며, 우리 국민은 동 기여금에 참여함으로써 성숙한 국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ODA규모의 상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원발굴에 적극적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며, 2005년 9월 유엔총회에서 밝힌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국제사회에서 주로 유럽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선도그룹으로 참여함으로써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제교육협력과 ODA*

이 현 훈 / 강원대학교 아태리더십센터 소장 경제무역학부 교수
박 의 정 / 강원대학교 아태리더십센터 사무국장

Ⅰ. 서 론 ····· 12
Ⅱ. 우리나라 국제교육협력 및 지원 현황 ····· 13
Ⅲ. 국제교육협력의 문제점 ····· 25
Ⅳ. 교육분야 ODA의 향후 추진방향 ····· 27
Ⅴ.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 29
Ⅵ. 요약 및 결론 ····· 32

* 본 논문은 2006.11.24(금) 한국교육개발원 주최『국제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논문임.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세계화 및 정보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부문에서의 국제협력과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간단히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부문에서의 국제협력과 지원의 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문에서의 국제협력과 지원"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정화(2003)는 국제교육은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동포, 그리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국제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인적 및 물적교류와 이에 요구되는 제반 협력사항들을 국제교육협력이라고 보았다. 즉, 교육부문의 국제협력은 교육학 또는 교육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간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하는 모든 인적 및 물적교류와 협력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문의 국제지원이라 함은 쌍방의 호혜적인 국제협력과 달리 주로 일방의 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유상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주로 교육을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에게 일방적으로 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유상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즉,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서 주로 광의의 교육부문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7억 4,36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국가 평균 0.33%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2005년도 ODA 지원규모는 2004년 대비 75.7% 증가하여 2004년 GNI 대비 0.07%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인데 이는 미주개발은행(IBD) 가입에 따른 출자금 지급 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1인당 ODA 부담은 2005년 15.2달러(2004년 8.8달러)이다.[1)]

즉,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 그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원조규모는 그 절대적인 규모와 GDP 대비 상대적인 규모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N의 권고기준이나 DAC 국가들의 평균치까지 ODA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2)]

1) 한편, 대북지원 실적이 민족간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ODA 통계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4억 3천3백만 달러를 포함시킬 경우 ODA는 GNI 대비 0.15% 정도이다.

2)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 11월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에서 2009년까지 GNI 대빌 ODA를 0.1%, 그리고 MDG 목표연도인 2015년에는 0.25% 수준까지 확대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육분야의 ODA는 2005년도를 중심으로 전체 ODA 협력사업비의 17%에 해당하는 총 364억원을 지원하였다. 교육분야의 ODA는 총액규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정책의 시행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모범적인 국가로서, 이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동인은 경제발전 초기단계부터 풍부한 인적자원과 함께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외국의 저개발국가에게 전수함에 있어서 교육분야의 ODA는 다른 분야 ODA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ODA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육의 국제협력 중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교육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분야 ODA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분야 ODA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제III장에서는 교육분야 OD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제IV장에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고 제V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Ⅱ. 우리나라 국제교육 협력 및 지원 현황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ODA는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의 권고기준이나 DAC 국가들의 평균치까지 ODA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에 기초하여 적은 규모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ODA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육분야에서의 ODA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의 경제발전과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것은 역사 · 문화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과 그에 따른 정부의 투자의 결과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교육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분야의 해외 ODA 확장은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ODA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개도국의 실상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체험하였으며, 다양한 인적자원육성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대국민을 우리나라의 우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유하는데 있어, 교육분야 ODA는 무엇보다 훌륭한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교육분야의 ODA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수원국 연수생들은 자국에서 경제발전의 지도자로서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해당국과의 긴밀한 경제, 정치, 사회 등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부문 ODA를 통해 상대국에 대하여 보다 더 알게 되고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지구촌 경제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ODA를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HRD)에 집중한다면,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KOICA(2005)는 "2006-2009 대외무상사업 추진전략"에 있어서 7대 전략적 지원분야를 설정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수원국 주민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분야이다.[3] 나머지 분야도 상당부분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분야이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한국형 ODA도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분야인 개발경험을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전수하여 이들의 경제발전과 빈곤완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장현식, 2006). 따라서 교육분야의 ODA는 향후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그 실천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ODA를 실효성 있게 시행할 것인가. 최근 들어 정기오(2005), 조원권 외(2004), 권대봉(2005), 남권형(2005) 등이 교육분야 ODA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교육분야 ODA의 총체적인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분야 ODA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이며 심층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은 규모의 ODA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분야의 ODA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KOICA의 7대 전략적 지원분야는 (1) 교육분야, (2) 보건의료분야, (3) 행정제도 개선분야, (4) 농촌개발분야, (5) 정보통신분야, (6) 산업에너지분야, (7) 환경 및 여성개발분야 등이다.

우선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ODA의 역사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우리나라 국제협력사업의 역사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사업은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자금지원에 의하여 연수초청훈련을 실시한 것이 효시이며, 1965년에는 우리 정부의 자금으로 연수생초청사업을 실시하였다. 1967년부터는 전문가 파견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77년에는 외무부가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도국에 우리 국산기자재를 공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80년대 들어서 국제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자 초청훈련사업 및 무상건설기술 용역제공사업, 노동부의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 등이 각각 시작되었다. 또한 1987년 30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하여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차관제공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기반을 갖추었다. 1989년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 UNESCO한국위원회 주관하에 시행되어 1990년 처음으로 개도국에 우리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조원권 외, 2004).

우리나라의 ODA 실적추이는 표 1과 같다. 그동안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앞서 밝힌 대로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7억 4,36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국가 평균 0.33%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OECD 회원이면서도 2005년 현재 ODA 공여는 GNI 대비 0.09%로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가장 높은 국가인 룩셈부르크 0.87%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 교육분야의 ODA 사업현황 및 성과

가. 교육분야 ODA 실적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고 있는 분야별 ODA 사업 중에서 교육분야의 연도별 규모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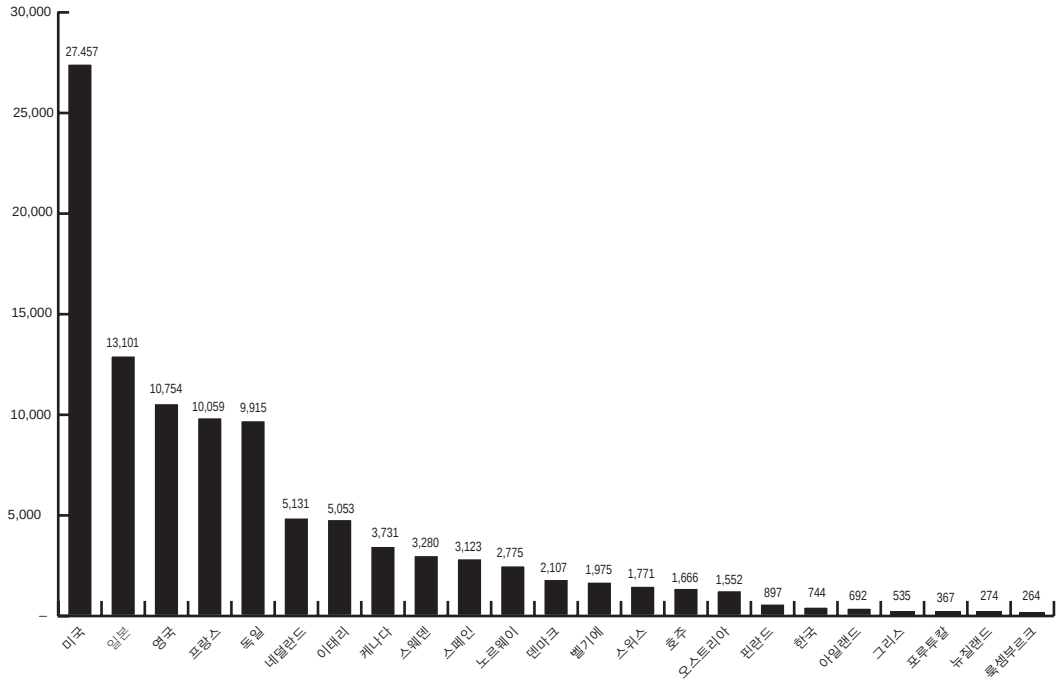
〈표 1〉 우리나라 ODA 실적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ODA계(A+B)	182.7	317.5	212.1	264.7	278.8	365.9	423.3	743.6
· 양자간(A)	124.7	317.5	131.2	171.5	206.8	245.2	330.8	456.5
- 무상원조	37.2	39.0	47.8	53.0	66.7	145.5	212.1	315.4
- 유상원조(EDCF)	87.5	92.4	83.4	118.6	140.1	99.7	118.7	141.1
· 다자간(B)	58.0	186.1	80.9	93.1	72.0	120.7	92.6	287.2
ODA/GNI(%)	0.06	0.08	0.05	0.06	0.06	0.06	0.06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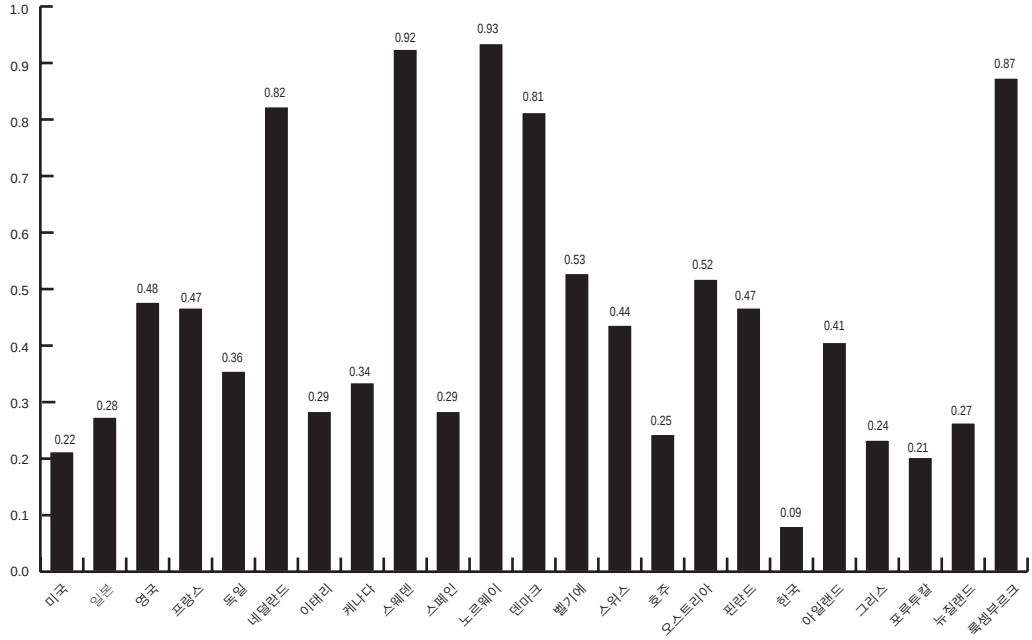
자료 : 재정경제부, 2006.

[그림 1] OECD DAC 회원국의 2005년 ODA 지원실적(잠정)



자료 : 재정경제부, 2005.

[그림 2] OECD DAC 회원국의 2005년 ODA/GNI 비율(잠정)



자료 : 재정경제부, 2005.
주 : 한국은 OECD DAC 비회원국.

이를 보면 표 2와 그림 3과 같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여 오다가 2003년부터 배 이상 늘어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ODA 총액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에 불과 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2000년 25.2%까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2003년 이후에 절대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해도 전체 ODA에서 교육의 비중은 그리 높아졌다고 불수가 없다. 교육은 그 특성상 개도국에 있어 자금이나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지속적이 훨씬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세부분야별 실적

2005년도를 중심으로 교육분야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협력사업비 17%에 해당하는 총 364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지원 형태로는 교육훈련 프로젝트 사업이 59.8%로 가장 높으며, 해외봉사단 파견(25.5%), 연수생초청(7.7%), 물자지원(5.7%), 봉사요원 파견(0.6%) 순으로 지원하였다. 본 장에서는 교육분야의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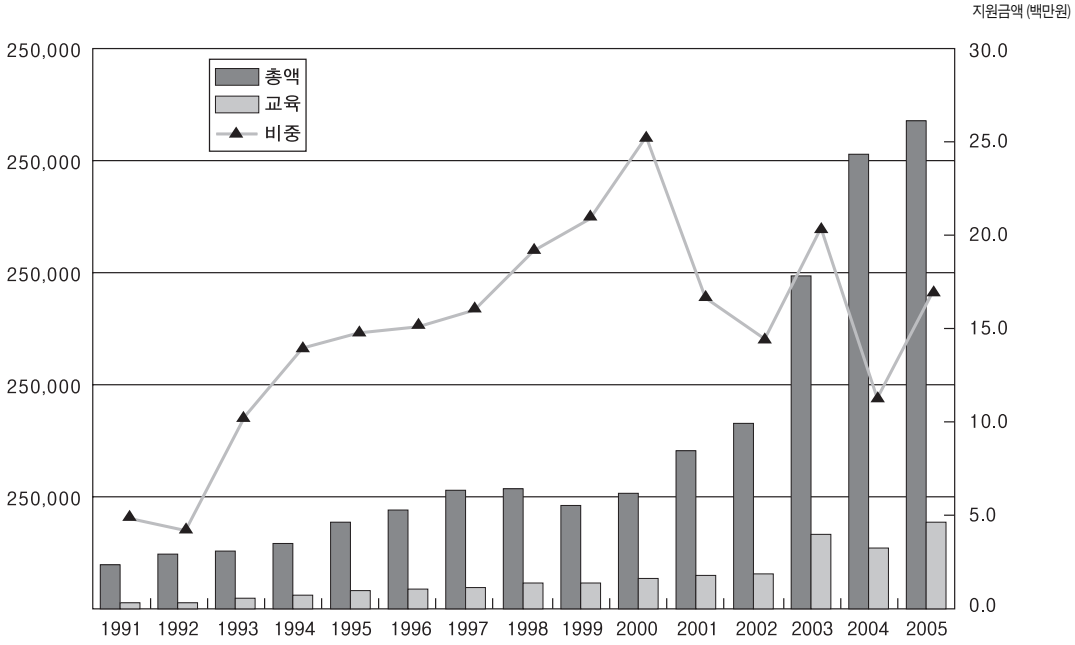
〈표 2〉 한국 교육분야 ODA 연도별 규모추이

(단위 : 백만원, %)

연 도	총 액	교 육	비 중
1991	17,377	899	(5.2)
1992	23,168	940	(4.1)
1993	24,605	2,469	(10.0)
1994	30,774	4,492	(14.6)
1995	37,959	5,664	(14.9)
1996	43,250	6,497	(15.0)
1997	52,761	8,396	(15.9)
1998	53,776	10,320	(19.2)
1999	45,116	9,464	(21.0)
2000	51,276	12,905	(25.2)
2001	69,718	11,016	(15.8)
2002	77,664	10,714	(13.8)
2003	147,900	29,792	(20.1)
2004	203,408	23,236	(11.4)
2005	215,121	36,421	(16.9)

자료 : KOICA, 2006.

[그림 3] 교육훈련분야 지원실적



자료 : KOICA, 2006.

첫째, 연수생 초청사업은 개도국의 공무원이나 전문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양 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연수생 초청사업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업형태로는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자금지원에 의해 수탁훈련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연수 분야별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 공공행정, 농림수산 분야에 대해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연수의 전이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범지구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및 여성개발 등의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연수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KOICA, 2006).

본 연수생 초청사업에 있어 그 연수기관은 중앙부처, 대학교,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2006년도 131건에 있어 9개 대학[4]만이 16건에 참여하고 있다.[5] 이는 전체사업 중 불과

4) 강원대학교 (아 · 태리더십센터),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기능대학,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5) 연수생 초청사업에 있어 강원대학교에서도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참가하였는데, 강원대학교 아시아 · 태평양리더십센터(소장 이현훈)에서는 2006년 06월 30일 ~ 07월 15일까지 총 2주간 동남아시아 14개국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차세대 지도자연수 - Young Leaders Training Progra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음

〈표 3〉 2005년 교육분야 세부사업별 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총지원액	교 육	비 중
총 계	215,121	36,421	100.0
프로젝트	72,756	21,784	59.8
물자공여	48,792	2,08	25.7
긴급원조	12,724	0	0.0
개발조사	6,784	0	0.0
연수생	15,228	2,810	7.7
전문가	1,224	218	0.6
의료단	1,887	0	0.0
태권도	1,198	0	0.0
봉사단	30,519	9,298	25.5
봉사요원	1,875	229	0.6
협력의사	1,204	0	0.0
NGO	2,837	0	0.0
행정비	15,766	0	0.0
개발인식증진	2,327	0	0.0

자료 : KOICA, 2006.

〈표 4〉 연수생초청사업 연도별 실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국가수	113	115	124	112	124	117	163
인원(명)	1,926	2,089	2,517	2,483	2,375	2,651	21,899
과정수	106	124	150	155	148	166	1,292

자료 : KOICA, 2006.
주 : 총계는 199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임

〈표 5〉 2006년 연수분야별 초청계획

구분	계*	교육훈련	의료보건	공공행정	ICT	산업인프라	무역금융	농림수산	기타	*여성	*환경
인원(명)	2,140	247	103	463	110	391	203	249	374	42	172
건(수)	131	14	6	34	7	23	13	16	18	3	13
금액(백만원)	12,960	1,496	624	2,804	666	2,368	1,229	1,508	2,265	254	1,042
점유율(%)	100	11.5	4.8	21.6	5.1	18.3	9.5	11.6	17.6	2.0	8.0

자료 : KOICA, 2006.
주 : 미정은 예비인원(214명) 포함, *여성 및 환경은 별도계상.

12.2%만을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인력 파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67년 에티오피아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최초로 파견한 이후 매년 재외공관을 통하여 전문가파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연간 40~50명의 전문인력을 개도국에 파견하고 있다. 그 기간은 1개월에서 1년 등 장 · 단기로 다양하며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여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있으며, 현재 개도국의 파견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연수생초청사업이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는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문인력 파견사업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나 참가가 매우 미흡하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거의 드물고 무엇보다 대학관계자들 스스로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을 파견하고 전문가를 파견할 경우, 학생 스스로에게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문가 파견사업은 무엇보다 개도국의 요청분야와 우리나라의 파견분야가 일치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파견요청 분야가 세분화되고 요청 자체가 증가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대학은 다양한 인재를 더 많은 국가에 파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으로 한국은 1990년 정부의 위탁을 받아 UNESCO한국위원회가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 4개국에 44명의 제 1기 해외봉사단원을 최초로 파견하였다. 그 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창설로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하여 표 7과 같이 2005년에는 총 30개국에 723명을 파견하여 지난 90년 이후 15년간 총 3,003명이 총 34개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해외봉사단 파견에 있어 팀제봉사단은 주로 2~5명의 봉사단원이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도 3개월에서 2년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로 해외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모두 마친 후에는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봉사단 파견에 있어서도 ODA 지원실적과 마찬가지로 2004년 및 2005년에 두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전쟁 및 분쟁에 있어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평화봉사단

〈표 6〉 2000~2005년까지의 전문인력 파견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가	20국 2기구	23국 2기구	26국 1기구	28국 1기구	28국 2기구	21국 1기구
인원	44명	46명	42명	40명	47명	40명

자료 : KOICA, 2006.

〈표 7〉 연도별 해외봉사단 파견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봉사단원	팀제단원	협력요원	협력의사	활동국가
합 계	3,003	1,845	542	527	89	36
1990	44	44				4
1991	37	37				7
1992	52	52				8
1993	51	51				9
1994	59	59				11
1995	106	78		20	8	19
1996	131	93		30	8	26
1997	138	90		39	9	23
1998	108	64		39	5	18
1999	103	70		28	5	21
2000	126	84		34	8	21
2001	181	134		37	10	24
2002	207	139		60	8	25
2003	208	120		80	8	27
2004	729	392	250	79	8	26
2005	723	338	292	81	12	28

자료 : KOICA, 2006.

(Peace Corps)이 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 미시건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에서 평화와 봉사를 실천하고자 설립한 후 2005년 현재 138개국에서 182,000명이 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교육분야는 전체 사업에서 34%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보면 이것은 개도국의 교육 · 훈련, 보건 · 의료, IT 분야 등의 지원을 위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어주는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한 다년간(2년~5년)의 사업이다. 사업분야는 교육 · 훈련, 보건 · 의료, IT, 농림 · 수산, 공공행정, 등으로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교육 · 훈련, 보건 · 의료 및 IT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8〉 2006년 프로젝트형 사업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육훈련	의료보건	공공행정	ICT	산업인프라	무역금융	농림수산	기타	*여성	*환경
인원(명)	2,140	247	103	463	110	391	203	249	374	42	172
건(수)	131	14	6	34	7	23	13	16	18	3	13
금액(백만원)	12,960	1,496	624	2,804	666	2,368	1,229	1,508	2,265	254	1,042
점유율(%)	100	11.5	4.8	21.6	5.1	18.3	9.5	11.6	17.6	2.0	8.0

자료 : KOICA, 2006.
주 : *여성 및 환경은 별도계상.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장비, 건물신축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지원, 교사 훈련 등의 기술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훈련포함)분야의 ODA의 연도별 추세를 유 · 무상을 합쳐 전반적으로 보면 위의 표 8과 같다. 이 도표 상 두드러진 점은 최근 3년 사이에 교육분야 원조액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ODA 원조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대학의 충분한 인적자원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본 프로젝트 사업의 전문가파견이나 연수생초청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나라의 기술인력 양성 경험 및 모델을 전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양자간 유상협력분야

공적개발 자금 중, 법적 채무를 동반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상환의 의무가 있는 차관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립되어 유상협력이 본격화 되었는데, 개발도상국 116개 사업에 약 20억불의 원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본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지원실적은 표 9와 같다.

표 9는 1987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부문별로 나타내고 있다. 교육훈련분야에는 전체 개발사업 138개 사업 2조3,739억원(2,406백만 달러)의 7.7% 정도에 해당하는 1,819억원(182백만 달러) 정도를 7개국 9개 사업에 개발차관으로 제공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이 교육훈련분야에 차관으로 공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부문의 사업내용은 직업훈련기관 건립 등 저개발국 교육인프라 구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대외협력차관기금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충분치 못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프로젝트원조 형태가 대부분인 물리적 인프

〈표 9〉 개도국 차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승인액계	개도국차관											해외투융자
		교 통	통 신	에너지	수자원위생	환경보호	보 건	교 육	공공행정	농수임	기타	소계	
합계	2,373,946	632,745	346,535	245,626	247,776	22,196	287,658	181,949	147,403	87,871	72,491	1,372,250	1,596
87	17,890	1,789	-	-	-	-	-	-	-	-	-	17,890	-
88	-	-	-	-	-	-	-	-	-	-	-	-	-
89	-	-	-	-	-	-	-	-	-	-	-	-	-
90	23,775	10,370	3,790	-	-	-	-	-		--	8,997	23,157	618
91	58,021	10,930	5,406	-	7,235	9,080	-	18,181	-	-	7,189	58,021	-
92	71,594	-	43,899	-	11,600	-	4,123	10,994	-	-	-	70,616	978
93	50,540	-	39,468	11,072	-	-	-	-	-	-	-	50,540	-
94	80,739	26,483	8,249	31,49	7-	-	-	8,110	-	-	6,400	80,739	-
95	106,036	1,673	24,505	-	26,807	-	-	-	-	-	23,051	106,036	-
96	302,662	106,016	77,087	66,696	9,739	-	18,020	-	8,171	16,933	-	302,662	-
97	94,690	17,955	-	17,903	4,444	-	27,534	-	-	-	26,854	94,690	-
98	107,802	44,178	16,114	14,044	-	-	22,668	-	-	10,798	-	107,802	-
99	179,397	17,066	35,099	934	45,336	-	34,728	39,251	6,983	-	-	179,397	-
00	242,321	64,018	-	74,496	43,274	6,638	53,895	-	-	-	-	242,321	-
01	140,712	27,015	35,259	-	23,400	-	26,198	-	26,350	2,490	-	104,712	-
02	147,318	80,388	-	-	-	-	30,700	36,230	-	-	-	147,318	-
03	179,730	46,008	32,075	28,984	-	6,478	-	27,630	13,079	25,476	-	179,730	-
04	248,724	58,767	-	-	79,121	-	20,467	41,553	48,816	-	-	248,724	-
05	321,895	73,988	25,584	-	96,820	-	49,325	-	44,004	32,174	-	321,895	-
비중	-	26.7	14.6	10.4	14.7	0.91	2.1	7.7	6.2	3.7	3.1	100.0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6

〈표 10〉 한국 교육ODA 연도별 차관공여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국 가	사 업 명	승인액	집행액	자금구분
	계		184,439	117,509	
1991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8,181	16,994	개발사업차관
1992	케냐	기술훈련소 설립사업	10,994	10,994	개발사업차관
1994	인도네시아	실업교육 개선사업	8,110	7,098	개발사업차관
1999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 개선사업	39,251	38,481	개발사업차관
2001	중국감숙성	농업기술연구소건립사업	2,490	2,489	기자재차관
2002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36,230	35,226	개발사업차관
2003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 개발사업	27,630	-	기자재차관
2004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건립사업	23,133	6,227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18,420	-	개발사업차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6.
주 : 우즈베키스탄은 구매계약 추진중이며 탄자니아는 정부간협정추진 중임.

라 구축 사업에 우선순위가 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은행이나 일본대외협력기금 등 해외교육차관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교육발전을 성취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으로서의 이러한 성공적 교육차관사업 경험이 공여국으로서 해외의 교육차관사업을 하는데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과거 교육차관사업에 참여했던 국내의 전문가들과 그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ODA 사업에 참여시키고 동원하지 못하는데 있다(정기오, 2005).

라. 기타의 교육분야 ODA 성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서도 교육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은 주로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국의 주요인사 및 학생에 대한 국내 초청 체류경비를 지원하거나 국내인사의 상대국 방문 체류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도 국제교류재단의 교육사업 중 교육분야 ODA는 다음 표와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경우 외국유학생 초청사업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유학생의 현황은 그림 4와 같다

이들 외국 유학생 중 2005년 자비유학이 17,599명, 우리정부 초청이 388명, 대학초청이 2,873명, 외국정부파견이 309명으로 자비유학이 전체 유학이 대부분이며, 정부초청은 약 1.7%를 겨우 차지하고 있어 이 중 ODA에 상당하는 개도국 유학생 초청의 비중은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04년도에 비해 정부초청 장학생은 증감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분야의 ODA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 및 전국의 대학을 통해 실행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들 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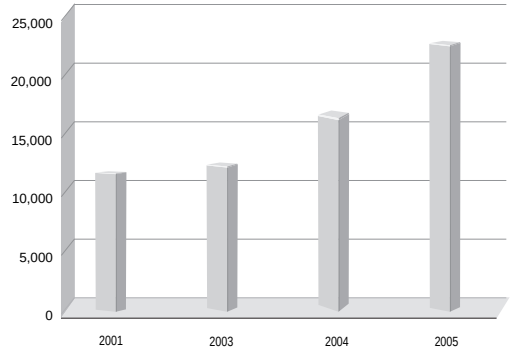
〈표 11〉 한국국제교류재단 교육분야 ODA의 국가별 지원액 (2005)

(단위 : US$)

국 가	지원금액	국 가	지원금액
중국	576,013	이란	34,875
러시아	212,932	미얀마	31,739
베트남	130,151	우크라이나	30,816
필리핀	110,027	캄보디아	30,816
인도네시아	89,529	키르키즈스탄	30,816
인도	84,722	몽골	28,643
멕시코	80,663	네팔	28,434
우즈베키스탄	75,676	리투아니아	27,656
폴란드	68,394	말레이시아	26,404
태국	67,875	벨라루스	20,408
불가리아	61,239	모로코	19,812
헝가리	58,495	체코	18,424
이집트	55,283	말레이시아	18,263
아르헨티나	54,911	에콰도르	17,604
카자흐스탄	53,344	세르비아-몬테네그로	17,262
라오스	47,099	칠레	16,464
방글라데시	43,225	사우디아라비아	16,141
터키	41,709	파키스탄	15,623
이스라엘	40,656	슬로바키아	15,545
대만	34,882	나이지리아	15,408

자료 : 한국국제교류재단, 2005.

[그림 4] 연도별 외국인유학생 현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표 12〉 유학형태별 유학생수

(단위 : 명, %)

유학형태	2004	2005		증감
		명	비중	
합 계	16,832	22,526	100.0	5,694
자비 유학생	12,842	17,599	78.1	4,757
정부초청 장학생	391	388	1.7	-3
대학초청 장학생	2,527	2,873	12.8	346
자국정부파견 장학생	198	309	1.4	111
기 타	874	1,357	6.0	48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의 출신국가[6]를 살펴봐도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비중도 높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도 상위 유학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가의 학생들이 주로 한국의 경제발전 및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하여 유학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III. 국제교육협력의 문제점

ODA의 많은 부분이 비록 빈곤과 기아해결 등 인도주의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ODA의 직접적 성과는 오히려 상대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교육분야 ODA에서도 상대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목적 외에도 많은 부수적 성과를 기대하며 정책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진다.

그 중 첫 번째는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대국민을 우리나라의 우방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교육분야의 ODA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대외적으로 그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교육원조를 확대하여 차세대에 있어 한국을 지원하고 친한적인 인적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ODA는 공여 상대국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많은 한국의 차세대 주자들이 상대국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여기에 두 번째 성과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을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면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6) 교육인적자원부(2005)에 따르면 2004년도 한국내 유학생 비중은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대만, 5위 베트남, 6위 몽골 등임.

이와 같이 교육분야의 ODA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육 OD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절에서는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 ODA의 비중이 너무 적은 형편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ODA 총액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 기준 불과 17%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ODA 전체사업에서 교육분야가 예산의 분배나 정책의 입안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5년 세부사업(표3 참조)인 프로젝트, 물자공여, 개발조사, 연수생 등의 14개 사업 중 교육이 참여하는 것은 6개 분야 뿐이다. 심지어 표 9의 우리나라 EDCF의 교육분야 지원액을 보면 1987이후 2005년까지의 실적에서 교육은 단지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들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전체 ODA 중 교육분야는 그 효과와 수혜범위가 상당히 대규모이며 장기적, 잠재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ODA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간과되어 왔다.

둘째, 교육 ODA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부재한 형편이다. 아래 표 13에서도 나타나지만 교육분야의 ODA는 각 기관별 지원내용 속에 산발적으로 속해있다. KOICA의 연수생 초청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교사 등의 초청연수 사업, 각 정부부처의 피교육자 초청연수 사업 등이 있으며 그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곳도 대학, 연구소 등의 산발적인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ODA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셋째, 교육 ODA에 실질적인 교육기관인 대학 등의 참여가 부족하다. 현재까지 많은 대학에서는 ODA 분야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훌륭한 인재와 고급 기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이러한 ODA에 대한 인식을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 할

〈표 13〉 2005년 각 부처별 ODA 사업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EDCF)	4,612.7 (2,000.0)	차관 및 국제개발은행 출연, 경제개발 컨설팅
정보통신부	116.4	IT연수, 전문가, 봉사단 파견 등
교육인적자원부	84.7	교사, 연구원 초청연수
해양수산부	8.7	전문가 초청연수
보건복지부	6.1	대한한방의료봉사단
과학기술부	2.8	동구 R&D 연수
여성가족부	1.7	APEC 여성 IT교육
문화관광부	1.0	UNDP 개도국 관광지원
농림부	0.5	아시아 농업정책 워크샵
공정거래위원회	6.0	국제경쟁정책 워크샵
국가보훈처	0.6	대한한방의료봉사단
국세청	0.1	몽골 세무 공무원연수
관세청	0.5	아태 무역 세미나
농촌진흥청	5.4	RDA 동문회사업
산림청	7.4	중국 사막화 사업
특허청	0.2	
소 계	4,854.7	
외교통상부(KOICA)	2,221.4	
합 계	7,076.1	

자료 : KOICA, 2006.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은 ODA에 있어 교육분야가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에 따라 현재는 대학들이 ODA 사업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연수생 초청사업이 모두 131건인데 그 중 불과 9개 대학만이 16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의 문제는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좀 더 봉사정신을 배우고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전문분야를 습득하고, 그 국가의 지역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ODA 교육관련 사업에 있어 연수생 초청이나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사업은 대학과 함께 시행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각 대학 및 대학생을 방문하여 순회 사업설명회나 모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DA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좀 더 적극적인 관련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분야 ODA와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교육훈련분야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및 경제환경을 이해해야만, 수원국의 여건과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 ODA를 연구하는 그룹이나 단체도 거의 없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육 ODA가 가져올 긍정적 결과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IV. 교육분야 ODA의 향후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 이면에는 선진국으로부터의 ODA가 큰 역할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 또한 국가의 발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투자라 할 수 있다. ODA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개발에 앞선 국가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부문 ODA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개도국에 대한 교육지원은 ODA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여타 부문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규모로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협력과 지원을 통해 개도국에 대하여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문 ODA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GNI 대비 GDA 규모를 2015년

까지 0.25%로 확대하고 교육분야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연차별 확대계획이 수립하여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분야 ODA의 통합적 관리와 조율이 필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 및 기업에서도 교육 ODA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ODA의 전체규모와 함께 교육부문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각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관련 ODA의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UNESCO, 각 대학 및 연구기관, 관련 NGO 등 통합되고 조율된 업무처리가 매우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교육원조기관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향후, 동 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교육관련 업무의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ODA의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 교육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그 특성상 자금지원이나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단계에서 다양한 교육지원 관련 정책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ODA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서 교육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육 ODA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 ODA 사업 중 연수 프로그램은 피교육생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연수생 초청사업과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현지파견 연수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비용면으로 보면 파견 연수사업이 대규모의 인원을 저비용으로 연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여러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초청사업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거의 모두 단기적 사업들이다. 일회성을 끝나버릴 수 있는 이러한 단기프로그램들은 연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연수생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여러 기관에 위탁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연수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도국의 젊은이들을 선발한 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위탁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유학생 초청사업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개도국 지역, 경제발전, 국제개발분야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많은 개도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해외 공관을 통하여 그러한 수요를 조사받고 연수 프로그램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긴 하지만 더욱 세분화 되어가는 수요에 맞추어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개도국 지역 및 경제발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최선진 개도국까지의 다양한 발전경험을 지녔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자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이다. 특히 교육을 바탕으로 한 발전과 개발경험을 지녔다는 점 때문에, 공여국 입장에서 어떤 측면이 저개발국가에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보다 내실있는 국제사회의 봉사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 일부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정책 입안에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는 한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교육 ODA 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중등 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홍보, 시민홍보, 그리고 정책결정론자들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V.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많은 대학에서는 ODA 분야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한국교육의 해외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은 좀더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야 하고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학의 적극적인 ODA 참가 필요성

첫째, ODA를 통하여 많은 개도국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며 개도국 유학생 유치도 가능해 진다. 현재 대학은 신입생 유치경쟁, 대학간 통합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경쟁력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대학의 국제화 전략은 자매대학, 외국 대학과의 교류, 외국으로 분교설립, 외국유학생 유치 등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 ODA를 통하여 많은 개도국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며 개도국 유학생 유치도 가능해 진다.

둘째, ODA 사업 참가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 맞

이하여 대학은 대학생들의 국제적인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이 ODA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연수생 및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생들의 해외봉사를 적극 유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재학생들의 국제화가 가능하다.

셋째, 대학은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ODA를 접목하여 특성화 시킬 수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ODA 전문연수기관이 될 수 있으며 의료, IT, 산업기술, 축산, 농업 등 타 대학에 비교하여 경쟁력이 우수한 분야에 많은 ODA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화 대학은 ODA 전문가 양성프로그램과 강의를 개설하거나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적인 ODA 연수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청 연수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료할 수 있는 특별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화 대학은 재정의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NGO 들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은 위와 같이 ODA를 통하여 대학의 국제화와 특성화 등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2. 대학의 역할

첫째, 국제개발 및 ODA 관련 연구와 전문가 양성교육이 시급하다. OECD의 수준을 따라잡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향후 ODA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도 그 기관과 내용이 향후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도국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ODA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특성을 이해하는 개발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개도국과 개발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국제대학원이나 국제통상대학원에서 국제교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나, 국제개발 및 원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강의를 개설하거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도국의 국비유학생 초청 및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초청의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 중 겨우 1.7%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ODA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학생 초청은 훨씬 더 작다. 석박사과정의 대학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과 그에 적합한 한국의 개발경험 과정을 개설하여 초청유학생 전문대학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홍

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KOICA를 통하여 나가는 해외봉사단원 수가 기존 200여명에서 2003년 이후 700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개도국 사람들에게 본인의 기술과 봉사를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면 그 국가에 대한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등 자신에게도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파견 대상분야도 상당히 다양하므로 많은 대학생들이 젊은 시절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그 참여에 따른 학점취득 등 각종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 대학에는 봉사활동 동아리나 단체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이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을 대상으로 해외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봉사활동 이후에 이들이 ODA 관련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활동 간의 교류 및 해외봉사단체들과의 연계도 도모해 볼 수 있다.

넷째, 대학은 개도국의 전문가파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ICA와 한국국제협력재단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인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그 비중에 있어서는 KOICA의 경우 매년 20여개국 약 40여명을 파견하고 있다. 이것은 개도국의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교육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단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개도국 정부들로부터 파견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요청이 높은 경제정책, ICT, 직업훈련 등에 많은 국내 대학이 활발히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급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대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도국에 이러한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학은 해외의 시설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도국의 교육이나 훈련, 보건 및 의료 등 특정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KOICA를 비롯하여 몇몇 지방자치단체도 개도국에 학교와 병원 등을 설립하고 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참여하는 단체도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 특성화된 분야의 장점을 살려서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개도국 현지에 직접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 해당 대학이 해외에 분교나 센터를 설립하여 그 국가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해 줄 수 있다.

여섯째, ODA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이 ODA를 추진할 때 그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봉사프로그램을 수행하는 NGO, 민간기업 그리고 ODA 관련기관과의 양해각서(MOU)와 같은 업무협약을 맺어 좀 더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 · 관 · 학의 협력으로 종합적으로 체

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단체와의 교류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협약은 장기적인 ODA 사업계획 수립도 가능하게 해 주며 현 ODA 프로그램의 발전도 가져다 줄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 그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원조규모는 그 절대적인 규모와 GNI 대비 상대적인 규모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N의 권고기준이나 DAC 국가들의 평균치까지 ODA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록 적은 규모의 ODA일지라도 다른 공여국에 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교육부문에서의 ODA규모를 확대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민들이 빈곤국에서 선진국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다른 개도국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개발 또는 빈곤퇴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분야 ODA에 대한 기구와 체제를 정비하여 교육부, KOICA, 대학, 교육청 등 교육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도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ODA를 특성화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21세기 한국대학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있어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대학은 자체적으로 ODA 전문연수센터를 개설하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국제개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국내외 유학생 통계,” 2005. 12.

_____, 한국교육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원조 활성화 방안, 2006. 9.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실,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2005.11.15.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외원조(ODA) 정책 개선방안,” 2004. 12.

미국평화봉사단 (Peace Corps) http://www.peacecorps.gov/

재정경제부, “2005년도 ODA 현황,” 2006.

한국국제교류재단, “2005년도 ODA(OA) 지원실적,” 2005.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및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korean/mainframe.html

한국수출입은행, “2005 EDCF Annual Report,” 2005.

권대봉, “한국의 대개도국 교육분야 ODA: 현황 및 향후전략,” 제2차 유네스코 교육포럼, 2005. 6.

남권형, “한국해외협력단(KOICA)의 교육분야 국제원조사업,” 제2차 유네스코 교육포럼, 2005. 6.

서정화, “국가간 국제교육교류 · 협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3-공모-1, 2003.

장현식, “한국형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추진방향,” KOICA-아태리더십센터 공동 심포지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와 대학의 역할』2006. 9.

정기오, “한국교육분야 ODA 추진전략,” 제2차 유네스코 교육포럼, 2005.

조원권, 장지순, 김홍기, 오영삼, 남동식, “한국교육의 해외수출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4. 12.

전승훈, 이태주, 김달현, 이태희, 전은영,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연구자료 정책연구 2006-2-19, 한국국제협력단, 2006. 3.

최정윤, “유네스코 고등교육 사업과 한국의 활용 전략: 진단과 제언,” 「유네스코와 교육」제2부 6장, 오름, 2006.

[참 고 자 료]

〈표 1〉 국가별 교육관련사업 지원 요청현황 (2006)

(단위 : 백만원)

국가명	요청계기	사업내용	비고
콜롬비아	중남미 IT사절단 현지 방문시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참여 요청	EDCF 차관사업
과테말라	중남미 IT사절단 현지 방문시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요청	EDCF 차관사업
우즈베키스탄	EDCF 협정	초중등학교 컴퓨터교실 설치,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센터 설치 및 교육	'06. 3월 차관 공여 체결 (재정경제부)
		실업계 고교 교육훈련용 기자재 공급, 교사훈련, 입찰자문 컨설턴트 고용	'06.6-8월 컨설팅 업무 수행 중 (재정경제부)
카자흐스탄	교육협력 약정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분야 협력 · 교환 등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부 차관 방한 후속 조치	교육단지 조성사업에 기술적 지원요청	한국산업기술대, 전자부품연구원 (과학기술부)
리비아	국무총리 순방시 지원약정 체결	직업훈련원 건립	KOICA 무상 원조 (외교통상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리비아	IT분야 협력사업	IT인력 초청연수 사업,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국내 IT 정책 및 학위과정 유학지원, IT 단기 기술과정 연수, 사이버교육 사업	정보통신부
몽 고	대통령 몽골 방문시 건의	한국학 교육센터 설립	외교통상부
파키스탄	명지대와 MOU 체결	파키스탄 고등과학기술 교육기관(PAIST) 설립위한 자문 및 지원요청	파키스탄에서 국내 다수대학과 접촉
레소토	교육인적자원부 방문시 건의	직업교육 및 ICT 분야 지원요청교육	인적자원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표 2〉 KOICA 교육 · 훈련분야 프로젝트/개발조사 사업 내역 (1991-2004)

(단위 : 천불)

구 분	지 역	국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프로젝트	아 · 태	인도네시아	한, 인니 직업훈련원 지원	91-94	5,200
		스리랑카	개방대 한국어교육지원	92-93	120
		스리랑카	아동복지원 지원	93	120
		베트남	빈딩성 초등학교 건축지원	94-96	250
		베트남	하노이,퀴논직업훈련원 지원	94-98	2,500
		스리랑카	한,스 직업훈련원 지원	94-96	2,000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원 지원	94-95	228
		파키스탄	초등학교 건축지원	94-96	800
		미얀마	라쇼대학 강당시설 개선	95-96	500
		베트남	네안성 초등학교 건축	95-96	250
		중국	도문 제3소학교 지원	95	450
		중국	강소성 양주직업학교 지원	95	200
		중국	금평현 민족직업학교 지원	95	340
		태국	벽지학생 복지향상 지원	95-96	350
		태국	찬드라카셈대 한국어센터 건립	95	100
		태국	출라롱콘대 한국어센터 건립	95	100
		스리랑카	개방대 실습실 지원	96-98	1,000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사범학교 지원	96-97	500
		중국	상해 한국어센터 지원	96-98	900
		중국	위해 한국어센터 지원	96	190
		태국	송클라대 한국어센터 건립	96	100
		태국	치앙마이 한국어센터 건립	96	100
		방글라데시	다카대 한국어센터 지원	97	100
		베트남	산업기술학교 지원	97-01	5,000
		중국	한,중 직업훈련원 지원	97-00	10,000
		PNG	카리타스여자기술학교 지원	97-98	250
		몽골	국립원거리 교육센터 건립	98-00	340
		몽골	한,몽 기술대학 지원	00-01	700
		베트남	중부지역 초등학교 건립	01-02	2,000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02-05	2,000
		라오스	초등학교 건립	03	100
		필리핀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	03-05	5,000
		스리랑카	자프나기능대학 개선사업	04-07	2,330

구 분	지 역	국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프로젝트	미주	자메이카	기술훈련소지원	91-92	257
		도미니카	1차 초등학교 건립	92-93	585
		과테말라	제1 청소년복지원 지원	93-95	700
		도미니카	2차 초등학교 건립	96-97	600
		파라과이	기술전문학교 지원	96	200
		과테말라	제2 청소년 직업훈련원 건립	97-99	500
		과테말라	제3 청소년 직업훈련원 건립	97-99	500
		니카라과	벽지농촌 교원주택 건립	97-99	1,000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건립	97-99	1,000
		페루	식품기술훈련원 건립	98-00	1,000
		볼리비아	기술교육훈련원 지원	00-02	750
		코스타리카	기술훈련원 지원	00	230
		니카라과	직업훈련센터 강화	02-03	383
		과테말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	03-04	1,200
		니카라과	국립농업기계화훈련원 현대화	04-05	338
		코스타리카	우에따르노르떼 직업훈련원 지원	04-05	330
	아프리카	케냐	기술훈련소 지원	91	600
		튀니지	Amira 직업훈련원 지원	94-95	400
		케냐	나이로비공대 현대화	95-96	500
		남아공	기능검정센터 지원	97-01	3,000
		튀니지	국립직업훈련센터 지원	97-99	1,000
		모로코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개선	04-05	500
		알제리	직업훈련원 지원	04-05	1,000
		이디오피아	참전용사촌 지원	04-05	800
	중동	수단	한,수 직업훈련원 지원	92-98	4,790
		이집트	Shorabia 직업훈련원 지원	93-95	600
		이집트	자동차정비센터 지원	96-99	1,500
		팔레스타인	PA 초등학교 증축	97-98	200
		아프가니스탄	한,아프간 직업훈련원 건립	03-05	9,000
		아프가니스탄	공무원훈련원 건립	03-04	6,000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	03-06	9,000
		아프가니스탄	한,아프간 직훈원 기숙사 건립	04-05	2,027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학교 건립	04-05	800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04-05	1,800
		팔레스타인	교육시스템 개선	04-05	2,300

구 분	지 역	국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러시아	사할린 한인학교 지원	95	200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대 한국어 강좌개설 지원	95-97	150
프로젝트	구주 및 CIS	우크라이나	Klovsky Lyceum학교 증축지원	97-98	500
		불가리아	소피아대 한국어과 지원	01	300
		루마니아	Cluj-Napoca기술대 지원	03	220
개발조사	아프리카	튀니지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96-97	16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주 : 원자료는 KOICA

〈표 3〉 유네스코 고등교육 사업을 위한 2006-2007 예산

주요사업명 / 담당과	위한 정책 조언과 정보교환	예 산	
고등교육을 위한 정책옵션 향상/ RIQ주관	• 질보장 · 인증 영역에서 회원국들 역량 강화 • 개발도상국, 분쟁후지역 국가들을 위한 정책 조언과 정보교환 • 유네스코 고등교육 포럼을 통한 정책정보 및 의견교환 활성화	정규예산 비정규예산 합 계	$900,000 $3,228,000 $4,128,000
발전을 위한 대학간 협력 도모/ ICE 주관	•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동력으로서 지역내 대학간 협력을 도모-파트너십 발전 • 연수와 연구분야에서 세계 각지역 사이의 협력 강화 • 대학과 다른 시민사회 파트너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또한 정책결정자, 연구자, 교사,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 유네스코 고등교육 포럼과 UNITWIN Networks를 활동 메커니즘으로 활용	정규예산 비정규예산 합 계	$600,000 $290,000 $890,000
교육에서 ICT 활용 증진/ RIQ 주관	• ICT를 통해 교수학습과정의 질과 영향력을 향상시킴 • I혁신적ICT에 기초한 방법으로 양질의 교육체계 · 자원 ·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IEFA(Education for All)와 교사연수 발전을 위한 미디어와 ICT 해법 개발	정규예산 비정규예산 합계	$338,800 - $338,800
		총 계	**$ 5,356,800**

자료 : 최정윤 (2006) 재인용
주 : 유네스코 문건33C/5에서 발췌한 상기내용은 2005년 10월 기준의 예산안이며, 최종예산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표 4〉 UNITWIN Networks[7] / UNESCO Chairs 프로그램 참가한 국내교육기관

년도	주관기관	활동분야	협력기관
1995	일민 국제관계연구소 (고려대)	Peace, Democracy, & Human Rights	UNESCO Chairs on Human Rights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Beijing UniversityUniversity of IndonesiaTsukuba UniversityUniversity of MalaysiaUniversity of the Philippine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Thammasat University
1997	서울대학교	Philosoph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Hanazono UniversityUniversity of New DelhiUniversity of Punjab (Pakistan). Ateneo de Maniloa (Philippines).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1998	숙명여자대학교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Women	
2003	계명대학교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자료 : 최정윤 (2006) 재인용.

7) 1992년에 시작된 UNESCO Chair/ UNITWIN (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 Scheme) Networks 프로그램은 1998년 세계고등교육회의(WCHE)을 계기로 그 중요성과 활동이 강화되어 현재 121개국, 600여개 고등교육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동 유네스코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전세계 유네스코 회원국간에 정보와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국가 역량을 높이고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주요 참가자는 많은 고등교육관련 비정부단체, 연구기관, 재단, 그리고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대학들이다.

Ⅱ. KOICA 업데이트

1.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정책 방향”
   - 신장범 KOICA 총재
2.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시민 사회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 포럼
3. KOICA 대외무상원조 평가지침
4. KOICA 직원 타 원조기관 방문 결과보고
   - 원조 현장 중심화 실행방안(MPI 및 타 원조기관 방문 결과 보고)
   - JICA, UNOPS, UNV, Hellenic Aid, SDC 방문 결과 보고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정책 방향" *

신 장 범 / KOICA 총재

I. 인사

우선 금번 포럼에 참석한 아프리카 각국 장관 및 학계, 국제기구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의「대아프리카 ODA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서 발표한「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번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점차 확대 발전되는 시기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기조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어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방향 및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한국의 대외원조

과거 선진국의 개발원조 수원국이었던 한국은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한국은 1987년 유상원조(soft loan)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개도국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적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 본고는 신장범 KOICA 총재의 "제 1차 한-아프리카 포럼(2006. 11.8)" 발제 자료임.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온 원조가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국제사회 지원에 대하여 적절히 보답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력에 상응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1960년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주요 산업국 중의 하나로 성장한 개발경험을 체계화 · 모델화하여 개도국과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외개발원조(ODA)를 통한 적극적인 개도국 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UN 천년목표(MDG)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 달성 및 범지구적 과제해결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바 있습니다. 동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GNI의 0.1%, 2015년까지 GNI의 0.25%의 ODA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기초로 한국국제협력단은,

첫째, 개도국 수요에 부합하고 우리 개발경험 공유가 가능한 사업 즉 인적자원개발(HRD) 및 정부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빈곤완화, 기초보건, 초등교육 등 인간기본욕구(BHN) 분야와 여성인권, 환경 등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도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신속한 재난구호와 복구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Ⅲ.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방향 및 계획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의 발표를 통해 2008년까지 한국의 대 아프리카 ODA를 3배로 확대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아프리카 각국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3년간 총 2천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을 초청하여 연수시키고, 아프리카에 봉사단 파견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

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원조 예산을 2006년도 전체예산의 9%에서 2009년도에는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보다 수원국 현실에 부합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점 지원분야를 교육, 보건, 농촌 개발, 행정제도, ICT 등 5개로 정하고, 협력대상국별로 원조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원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우선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되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지원을 위해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 인력의 취업기회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시설 신축、개선、확충,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직업훈련원 건립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초의료 서비스 개선, 영유아 및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HIV/AIDS 및 말라리아 등 주요 질병퇴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시설 지원,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개선, 의료인력 양성, 의료 기자재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아프리카 한발피해 대상국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우간다, 지부티 등에 대하여 식수공급시설 개선 및 확충, 관정개발 및 보수, 식수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협력단은 '06.5월 에티오피아, 케냐, 지부티 3개국에 사업형성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고, 11월 현재 에티오피아, 케냐 2개국에서는 관정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자니아에서는 12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셋째,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 및 1차 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 및 수산업 분야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농수산 분야 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어업기술, 농촌개발 등 지원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우리의 정부 주도형 개발경험 전수, 정부 행정능력 강화, 행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알제리,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국별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경제개발, 산업육성, 재정정책 등 테마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통신망, 전산망 등), 정보통신 정책 및 제도 구축,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정보통신 인력 교육훈련, 정보통신 기본 장비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과 질병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공권 연대기여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동 항공권 연대기여금 제도는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 재원을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집중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양자차원의 지원과 함께 다자차원의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정책 능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UNDP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밖에 UNFPA, NEPAD 등의 의료 및 농업분야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Ⅳ. 맺음말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한국은 그 발전 경험을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전쟁 및 가난을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로, 이러한 한국의 개발경험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과 한국의 개발경험이 함께 한다면 발전을 위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와 한국의 상호 협력이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의 발전경험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Korea's ODA Policy toward Africa"

Shin Jang Bum / KOICA President

I. Greeting

It is my great pleasure to speak on "Korea's ODA policy direction for Africa" today, and I woul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all of the ministers from Africa and distinguished guests from the academ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tending this forum.

"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 was announced during President Roh Moo-hyun's visit to three African countries last March. The Initiative has significant meaning since it offers Korea the opportunity to strengthen its role in Africa's development. Today's forum between Korea and Africa is timely because it is being held at a time whe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frica is significantly increasing.

Today, I will introduce Korea's ODA policy direction in general and its assistance guidelines as well as future plans for the African region.

II. Korea's ODA

In the past, Korea received development assistance from advanced countries. Now it has grown to become the world's 11th largest economy and has become a donor country.

By establishing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to provide

concessional loans in 1987, Korea began its efforts to help the developing world achieve their socio-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in 1991, Korea establishe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o implement technical cooperation and grant aid programs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building their capacities for development.

Recognizing that international assistance greatly helped with its development, Korea believes that it should return the favor it received in the past and join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Moreover, Korea intends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world commensurate with its economic power. Korea is willing to share the development experience it achieved while it rose from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in the early 1960s to become a major industrialized country.

Since the inauguration of Korea's current administration, strengthened relationships with the developing world have become a priority, and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African countrie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joined efforts to achieve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such as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o address global issues in order to reduce poverty and support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Korea has reaffirmed its strong determination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establishing a mid-term plan for ODA spending and by setting up specific goals. In accordance with its mid-term plan for ODA spending, Korea will increase its ODA budget to 0.1 percent of its GNI by 2009 and 0.25 percent by 2015.

Based on such goals, KOICA places priority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governmental capacity building where Korea can mee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ransfer its development experience.

KOICA also strengthens its support for sectors related to basic human needs such as poverty reduction, basic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and for global issues related to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the environment.

Moreover, KOICA has established an efficient system for rapid disaster relief and reconstruction activities to respond to earthquakes, typhoons, and other natural disasters which have frequently inflicted damage on developing countries in recent years.

III. Korea's Assistance Guidelines and Future Plans for the African Region

President Roh, Moo-hyun declared Korea's pledge to triple ODA for Africa by 2008 through "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 during his visit to Africa in March this year.

As outlined in the initiative,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pport the capacity building of African countries by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with them. In this regard, KOICA decided to significantly increase its assistance for Africa by establishing a mid-term plan from 2007 to 2009. KOICA will increase its grant aid for Africa from 9 percent of its total budget in 2006 to 20 percent in 2009.

KOICA will spare no effort to meet the development needs of African partners and produce tangible results from its assistance. To this end, KOICA established country-specific assistance policies and implemented systemized assistance programs by designating five sectoral priorities such as education, health, rural development, governance,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Let me explain the five sectoral priorities.

First, KOICA will assist African countries with support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ince it played a critical role in Korea's development. In this regard, KOICA intends to provide increased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poor and underprivileged and expand job opportunities through vocational training. To this end, KOICA plans to build and modernize primary schools, improve education policies and institutions, develop curriculums, provide educational material, and establish vocational training centers.

In addition, during the next three years, KOICA will invite more than 2,000 African people to Korea for training programs and increase the number of overseas volunteers dispatched to the African region.

Second, KOICA will provide support to improve basic health services, reduce infant and child mortality, enhance maternal health, and combat HIV/AIDS and other diseases including malaria.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s, KOICA will support medical centers, improve health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 provide medical equipment and medicine.

Furthermore, KOICA will expand and improve drinking water supply facilities, develop and repair wells, and strengthen the capacity to address the lack of safe drinking water in draught-affected nations in East Africa such as Ethiopia, Tanzania, Kenya, Rwanda, Uganda, and Djibouti. KOICA dispatched feasibility study teams to Ethiopia, Kenya, Tanzania, Rwanda and Djibouti. KOICA is currently carrying out well development projects in Ethiopia and Kenya with a similar project to begin in Tanzania this December.

Third, KOICA will promote its support for projects in the sector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in an effort to help resolve food shortages and foster primary African industries. By utilizing Korea's exper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agriculture and fisheries, Korea can contribute to raising the productivity and income of African farmers and fishermen.

Fourth, KOICA will transfer Korea's know-how in government-led development,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capacity of government, and improv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this end, KOICA will create country-specific training programs for African countries such as Algeria and Egypt, and provide theme-based programs focusing on specific topics such as economic growth, industrial development, and financial policies.

Lastly, KOICA will support the ICT development of African countries by establish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uch as communication networks, devi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setting up e-government, conducting training program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ersonnel, and providing bas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to African countrie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legislation to introduce an air ticket solidarity contribution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itarian activities to reduce poverty and combat diseases. The air ticket solidarity contribution is slated to take effect with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upon the completion of legislative proceedings.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spending most of the resources from this fund on poverty reduction in Africa.

In addition to bilateral aid to Africa, multilateral cooperation programs will be expanded for the region.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frica, KOICA will carry out joint cooperative project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possess regional expertise and strong networks. In particular, from next year, KOICA will implement a joint-project wit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to foster human resources and strengthen the trade policy capacity of African nations. KOICA will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edical and agricultural projects of the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 and the New Economic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IV. Closing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to have risen from the ashes of war, overcome extreme poverty, and transform itself into a donor country in less than a half century. I firmly believe that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know-how will be useful to many African countries, and if Africa's abundant growth potential is combined with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 synergy effect will take root and further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of Africa.

Korea is determined to continue efforts to share development experience and know-how with African countries and support them in their drive to expand their growth potential.

Thank you.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시민 사회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 포럼

Ⅰ. 행사 개요

1. 일반사항

■ 주 제 : 「국제협력단 ·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강화 포럼」

■ 일 시 : 2006.11.23(목) 14:00~18:00

■ 장 소 : 국제협력 연수센터 대회의실(서초구 염곡동)

■ 주 최 : 한국국제협력단

■ 참석자 : 96개 기관 167명 (KOICA30명 포함)

- 정부(유관) 기관 : 32개 기관 51명
- 개발 NGO : 24개 기관 37명
- 기업 : 21개 기업 26명
- 학계 : 15개 대학교(원) 18명
- 기타 : 4개 기관 5명

2. 진행일정

식 순	시 간	주 요 내 용
개회식	14:00-14:20(20분)	- 국민의례 - 국제협력단 총재 환영사
KOICA 소 개	14:20-14:35(15분)	-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 방향 (박강호 국제협력단 이사)
주제발표	14:40-15:30 (각25분씩 총50분)	- 시민사회와 국제협력단 협력현황 및 파트너십 강화방안 (이해균 국제협력단 이사) -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이태주 한성대 교수)

식 순	시 간	주 요 내 용
휴식 (15:30-15:50, 20분)		
토 론	15:50-18:10 (140분)	- 사회 및 지정토론 · 사회 : 김은미 이화여대 교수 · 지정토론 : 총 11명 〈명단 후술〉 - 자유토론 - 국제협력단 총재 총평
만 찬	18:20~20:00	- 총재 주재 만찬 (국제협력연수센터 8층)

3. 포럼 목적

■ 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간 상호 보완성, 호혜적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파트너십 구축 방안 모색

■ 분야별 전문가 풀(기관 및 협회 포함), NGO,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언론사 등을 포괄한 광범위한 pro-ODA 시민사회(civil society) 네트워크 구축

■ ODA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적 지지 획득

■ 시민사회에 대한 국제협력단 및 ODA 홍보

4. 사회 · 토론자

이 름	소 속	분 야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	교 육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의료
황원규	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행정제도
정기환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촌개발
노일수	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보통신
이완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홍보위원회 간사	산업에너지
한비야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	재난구호 · 복구
박동균	동북아산림포럼 사무처장	환 경
김석환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장	직업훈련
손혁상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개발NGO
이욱원	주)한미파슨스 해외마케팅 상무	해외건설

Ⅱ. 발표 및 토론 내용

1. 발제 요지

■ 박강호 KOICA 이사

(제목 :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 방향)

- 대외무상원조사업 실시 환경 및 우리나라 ODA 현황
- KOICA 전략목표 및 기본방향
- 대외무상원조사업 집행전략(지역별/분야별)
- 우리나라 ODA 개선 과제

■ 이해균 KOICA 이사

(제목 : 시민사회와 국제협력단 협력현황 및 파트너십 강화방안)

- 시민사회의 정의 및 분류
- 파트너별 참여 현황 및 형태별、분야별 분석
- 개발원조 파트너십 강화방안으로 아래 6개 사항 제시
  - · 파트너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 대국민 홍보 및 인식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 · 개발협력 참여업체 발굴 노력 강화
  - ·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 · 시민파트너들의 ODA이해 증진 노력
  - · 파트너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강화 방안 강구

■ 이태주 한성대 교수

(제목 :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 국제개발과 시민사회, 다중적 이해당사자들
- 선진국의 국제개발과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례
  - · 영국 DFID
  - · 미국 USAID
  - · 호주 AusAID
  - · 캐나다 CIDA

- 한국 ODA 성과제고를 위한 다중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으로 아래 4개 부문 제시
  - · 지식기반 ODA 국제개발 파트너십
  - · 국제개발 에드보커시 시민사회 파트너십
  - · 민간기업과의 전략적 국제개발 파트너십
  - · ODA 성과관리 평가피드백 파트너십

2. 토론 요지

■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교육분야)

- 교육분야 지원을 한류 열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구현
- 정보 인프라, 초중등 멀티미디어, 고등 과학기술, 한국학 지원 등 교육분야 지원영역의 확대 추진 필요
- 시민사회 참여 및 활동 확대를 위해 홍보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 시민사회가 축적한 개발원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국제협력단이 확보하여 활용하고, 시민사회는 국제협력단과 약정 체결 등

을 통해 공식 네트워크 구축
- 방한 수원국 인사와의 파트십 강화차원에서 국제협력단이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사업성과 축적 및 지식·정보 공유를 위해 국제협력단의 지식경영 시스템을 구축

■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보건의료분야)
- 명확한 목적과 전략 수립이 우선 필요
-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 우선순위를 부여한 협력 실시
- 보건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인재육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 협력센터 설치, 시민사회와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실시
- 보건분야 사업을 위한 매뉴얼 개발(사업표준화와 지식 자원화)
- 개발인식 증진은 ODA 필요성 국내 전파 뿐 아니라 수원국과 지원국간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를 위한 방향을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감시하거나 촉구

■ 황원규 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교수(행정제도분야)
- 행정제도는 KOICA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지식 집약적이고 경쟁력 있는(비교우위를 갖춘) ODA지원 분야이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전략에 기초하여 추진 필요
- 50대 이상 시니어전문가들은 경제개발의 전(全)과정을 체험한 세대이므로 타 선진국에 비해 적용 가능한 개발경험 전수 가능
- 국제기구는 시민사회, 기업의 원조사업 참여를 적극 진작시키고 있음. 국내초청연수의 경우, 관심이 저조한 공공기관보다 대학 연구소 등을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특화 지원
- 행정제도분야의 집행기능을 외부로 대폭 이양하고, KOICA는 정책 수립, 기획 및 평가에 보다 전문화하는 역할 분담 필요
- 사업 조정 및 예산 집행 등에 보다 유연한 사업 추진 필요
- 개발협력사업 참가를 위한 시장 기능 도입(영리성 제공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 반관반민 ODA사업 집행기구의 설립 또는 개도국 전문 컨설팅 회사 등 준영리 법인의 참여 확대 및 육성

■ 정기환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농촌개발분야)
- 농업분야 중 식량, 농업정책, 농촌개발, 소득증대 등은 수원국의 우선 관심분야이며,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과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우리가 비교우위 보유
-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퇴치를 위해 중요한 국별 과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긴요
- (열대)농업과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ODA 전문가 양성 지원 필요. 개별 전문가보다 팀제

전문가 파견 시스템 도입 필요
- ODA사업 참여자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용역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원조규모 증가에 걸 맞는 역할 분담 (KOICA - 사업기획、평가/시민사회 - 사전조사、집행)
- 농업프로젝트는 개별 단위 사업보다는 종합개발 프로그램 추진 방식이 바람직.
-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 및 적극적인 전파

■ 노일수 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정보통신분야)
- 원조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저변확대와 예산확대 노력 경주
-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확보 노력 경주
- KOICA 및 전문NGO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거양

■ 이완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홍보위원회 간사(산업에너지분야)
- 포화상태인 국내 엔지니어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차원에서 경제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 추진
- 우리 건설업체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비구속성 ODA 집행 반대
- 개발조사사업 확대와 타당성 조사 후 유무상 원조의 연계를 통해 본 조사 시행 적극 추진
- 원조사업의 발굴 및 조달 경로 다각화(현지 기업이 개발한 사업의 조달은 정부가 아닌 동 업체가 직접 실시)

■ 한비야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재난구호、복구분야)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약속 이행
- ODA 전문가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 풀 활성화 뿐 아니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중요, KOICA에서 본건을 추진할 전담창구 지정
- 우리의 수요와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한국형 원조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책임성 있게 추진

■ 박동균 동북아산림포럼 사무처장(환경분야)
- 우리의 다양한 환경파괴와 복원 경험을 아시아 각국 및 시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친환경정책 개념을 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가 전파토록 공동 노력
- 수질자원관리, 환경관리, 환경시스템, 환경경영 등 우리가 선도하는 분야를 중점 아시아에 수출
- 중국이나 몽골의 황사 등 우리나라가 직접적 여파가 미치는 민감 분야 및 국가에 대한 지원 지속
- 국제협력단은 개발사업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활용하고, 시민사회에 공개 (국제개발연구센터 설립)
- 비교우위 환경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인프

라건축, 개발조사, 전문인력 파견, 국내 초청연수 등 중점 추진
- 양자간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간 사업에도 적극 참여
- 수원국 NGO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민간단체의 국내초청연수 적극 지원

■ 김석환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장(직업훈련분야)
- 파트너십 강화차원에서 원조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원조자금을 정부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창출시키는 방안 연구 필요
- 수원국내 교민에게도 원조효과가 파급되도록 정책적 배려
- 전문인력 파견시 민간기업 전문가 및 전문직의 은퇴자 공모를 통해 원조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 해외봉사단파견, 국내연수생 초청은 기존의 인프라 건축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
- 개발협력 컨설턴트 적극 육성
- 지식기반 개발원조의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의 참여 유도는 바람직하나, 장기연수, 학위과정은 시기상조

■ 손혁상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개발NGO)
-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포럼개최, 인식공동체 구성 등)
- 시민사회와의 공동 연구(연구센터 설립) 및 사업개발、선정、평가추진
- 개발 NGO, 전문가 육성, 연구프로젝트 지원

■ 이욱원 한미파슨스 해외마케팅 상무(해외건설분야)
-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국제협력단、수원국、민간기업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윈윈하는 사례

■ 송진호 한국YMCA 전국연맹 협력사업국장(자유발언)
- KOICA는 시민사회를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
-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는 외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이 우선 필요
-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효율성이외의 다른 가치도 감안하는 것이 긴요하고, 새마을운동, 태권도, 의사파견 등 전통적 지원 외 민주주의, 인권, 소수인종배려 등 여타 특별이슈도 추진필요

■ 유병욱 순천향대학병원 외국인 진료소(자유발언)
- KOICA는 교육기관으로서 연 800명 규모

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앞날에 기회를 제공하는 귀중한 역할

■ 이국근 한몽 교류진흥협회 상임이사(자유발언)
- 해외원조사업은 KOICA로 통합함이 바람직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는 KOICA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실현
- ODA예산 특히, KOICA의 인건비 인상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필요
- 해외봉사봉사단 운영위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Ⅲ. 평가 및 향후 추진사항

1. 평가

■ 1991년 국제협력단 발족 후 최초로 시도된 행사로서 이 기회를 통해 국제협력단 및 시민사회의 역할과 ODA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주요성과 거양
- 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간 협력 필요성 및 협력현황 소개
-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효과적 파트너십 구축 강화 방안모색
- 국제협력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지획득

■ 국제협력단 사업에 적극 활동한바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토론자로 참여시켜 실제적이고 내실 있는 토론 실시
- 정부, 학계, 개발NGO, 전문협회, 분야별 전문가, 민간기업 등 개발원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있는 각계각층의 다중이해 당사자를 토론에 참가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실천을 위한 노력 전개

■ 특히,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대외원조사업 및 국제협력단의 역할 확대가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다음 3가지 방향에 공동 인식

가. 시민사회의 사업수행 능력 강화 필요

- 시민사회의 전문가적 역량의 배양과 경쟁력 없이는 국제협력단이 추진하는 원조사업의 질 제고가 어려운 바, 국제협력단은 각 분야나 지역에 특화한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나. 시민사회 단체간 인적 교류와 정보교환 활성화

- 동일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와 기관이 네트워크와 상호교류를 촉진한다면 사업추진상 오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유관기

관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이 가능

– 국제협력단은 이들의 협력을 통해 각자의 지식과 정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

다.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확보 노력의 중요성

– 대외 무상원조는 여전히 일부 국민에게 그 효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

– 국민 동의 없이는 무상원조의 대폭적 예산 증액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제협력단 및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 강화 필요

2. 시민사회의 주요 관심내용

■ 파트너십구축 방식 및 선호 분야

– 지원확대 및 집행의 자율성 보장

– 지식기반 ODA사업 참여 및 국제협력연구센터 설립

– 시민사회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 주체

– 시민사회 자체 평가 및 자율성 존중

■ 국민참여 진작

–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 부각

3. 향후 추진사항

가. 기본방향

■ 대외원조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협력확대는 향후에도 중요

■ 따라서, 국제협력단은 전문적 시민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ODA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대를 위해

①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② 우수 시민사회단체 기관 능력 강화 및 인재육성 방안 강구

③ ODA 여론 주도층의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개발 적극 추진

나. 파트너십 구축강화

■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검토

– 민간기업 등 시민사회의 외연확대

· 국제협력 전문가 풀제 활성화 도모와 연계 추진

– 중장기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희망하고 있는 가칭「국제협력연구센터」설립을 지원하여 국제협력단、시민사회간 대화의 장 마련 추진

■ 효율적인 시민사회단체 지원방식 도입 검토

– 전문적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사업 추진 방안 모색

· 컨설팅 등 지식 집약적 사업형태 적극 개발

· ODA 전문 연구소, 컨설턴트 등 적극 육성 방안 강구

–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으로 적격 시민사회 단체 지원 방안 강구

– 우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국제협력 인재 양성 지원방안 모색

■ 개발원조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검토

– 분야별 · 지역(국)별 전문가 풀제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 커리어 관리 도모

– ODA사업 참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개발협력 전문가 인증제 도입 방안 검토

· 처우개선과 병행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 검증기능 및 질적 관리 강화추진

■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인식 증진 노력 강화

– MDGs, 빈곤타파, DAC가입, ODA정책 개선과제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지원 방안 검토

– 시민사회를 통해 여론 주도층 및 국민에 대한 ODA 홍보 강화

– 한국형 원조 모델 등 ODA에 대한 정책 연구 강화 및 적극 전파

다. 참여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역할 분담 강화

■ 시민사회 단체

– 보건의료, 교육 등 비교우위분야 지원 지속 확대

– NGO 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컨설팅 능력 확보로 다양한 개발 사업에의 참여 도모

– 기존 인프라 건축사업의 사후관리등과 연계한 활용 방안 모색

■ 정부 및 공공부문

– ODA정책, 법령 및 제도정비, 정부차원의 ODA 정보교환 등 적극 협력

– 개발 협력 및 사업 수행 관련 지식, 정보를 시민사회 및 기업 등에 제공

■ 민간기업

– 민간기업이 보유한 전문성을 ODA 사업 제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필요

– 고유 사업의 영리적 개념을 벗어나 정부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사업 마인드가 바람직

– 국제협력단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개발조사사업의 전략적 확대 추진 필요

KOICA 대외무상원조 평가지침

Ⅰ 기본 방향

1. 평가관련 규정 마련

■ 국제적인 평가추세와 현실적인 평가수행 능력, 정부의 상위 평가제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의 평가제도를 구축

– 원조실시기관으로서의 평가의 유형설정, 평가의 기준, 실시방법,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결과의 피드백등을 규정화

2. 프로젝트/프로그램 중심의 평가실시

■ KOICA의 평가는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와 사업형태별 평가를 중심으로 실시

■ 한편, 무상원조 실시전담기관으로서 계획 수립과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국별 평가, 분야별 평가는 직전년도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

3.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공동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 평가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의 계획과 평가결과를 전문적으로 검증

4. 평가결과 활용시스템 구축

■ 평가결과를 우량사업 선정 및 추진에 피드백하고, 평가보고서 발간을 통해 평가결과의 정보화 및 체계화

■ 평가 결과의 외부공개와 평가정보의 내부 공

유시스템 구축

Ⅱ 실시방안

1. 평가의 유형

■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KOICA가 실시하는 프로젝트/프로그램사업에 대해 사업실시 단계별로 중간, 종료,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충실하게 실시

■ 사업형태별 평가

- KOICA가 실시하는 국내 초청연수,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인프라 구축사업, NGO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

■ 국별/분야별 평가

- 직전년도의 사업을 대상으로 ①국별/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절성, ②국별/분야별 실시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review)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동 결과를 국별 재원배분 및 분야별 지원전략 수립에 활용

2. 사업평가의 기준

■ 사업별 특성, 평가의 유형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통적인 사업 평가기준을 정함.

- DAC의 5대 평가기준을 협력단의 사업 평가기준으로 정하되, 평가유형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가능

  * 5대 평가기준 :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3. 평가의 계획 · 실시 및 관리

가. 평가계획의 수립

■ 사업평가실에서 연간 종합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

  * 사업평가실 기능 : 평가계획의 수립 및 사업부서의 평가실시 관리,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평가결과의 피드백 업무 및 평가기준 수립 등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평가업무를 관장하는 이사
- 위원 : 총 11명(관련 사업 부서장 6인 및 분야별 외 부전문가 5인이내)

■ 평가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아래 사항 등을 심의하여, 평가실시계획의 타당성과 평가결과의 객관성

과 전문성을 검증

① 연간 종합평가 계획

②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실시계획과 결과

③ 사업형태별 평가 실시계획과 결과

④ 국별, 분야별 평가 실시계획과 결과등

다. 평가의 실시

■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간 종합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

– 평가의 실시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결과 공개

■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제 구축

– 평가결과 피드백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관리

– 평가를 통해 도출된 교훈사항 및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실시에 피드백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정보관리

– 평가결과는 대외에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기반 확대

– 평가보고서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집 발간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체계적 정리 및 정보화

KOICA 직원 타 원조기관 방문 결과 보고

Ⅰ. 원조 현장 중심화 실행방안
(MPI 및 타 원조기관 방문 결과 보고)

KOICA 본부 직원 해외사무소 OJT실시의 일환으로 베트남사무소에서 OJT중인 김현원 직원이 OJT일정 중 "원조 현장중심화 실행방안 모색" 관련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및 타 원조기관을 방문, 면담을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보고함.

1. 면담실시 개요

- 면담기관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JICA, SIDA, DANIDA
- 면담일시 : 2006년 9월 20일 ~ 28일
- 참 석 자 : 베트남 KOICA사무소 최문정 부소장, 김현원 직원
- 면담주제 : 원조 현장중심화 실행방안

2. 면담 주요내용

가. MPI(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면담자 : Mr. Pham Hung Vinh, MPI 국제경제관계국 한국원조담당과장
- 면담일시 : '06.9.20 오후 3시, MPI 회의실
- 면담내용
  - 주재국 기획투자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5개년 개발계획, 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원 중의 하나로서 ODA를 조정 총괄하여 국가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개발계획의 구체 사업내용은 지방정부나 타 부처의 요청에 근거하여 수요 리스트를 만들고 지역과 섹터를 감안하여 MPI에서 사전검토를 하며, 공여국들과 정책대화를 통

해서 사업을 선정함. 사업수요리스트(ODA 수원희망 사업리스트)는 매년 반기별로 열리는 원조공여국회의를 통해 원조공여국들과 공유함.

- 사업선정 시에 감안되는 우선순위는 사업의 긴급성, 해당 프로젝트의 준비상태, 공여국들의 국별지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MDGs, VDGs, 파리선언, 하노이 선언 외 개발 관련 이슈들은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MPI에서 조정하며 국가개발계획을 근간으로 ODA 사업을 조정 총괄하고 있음.
- Vinh 과장은 한국 역시 파리선언 및 하노이 선언의 서명국으로서 베트남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원조지원을 약속 한 바 ODA사업의 언타이드화가 확대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ODA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함.
- 원조공여국과의 고위급정책대화(High Level Consultative Meeting 혹은 Policy Dialogue)는 보통 년 1회 정도 실시되지만, 실질적인 실무급 협의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은 베트남 내 해외사무소, MPI, 그리고 각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해외사무소에 적절한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경우 실무급 협의가 의미가 없으며 현장중심의 원조수행이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함.

나.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면담자 : Mr. Nagase Tomonori JICA 하노이 사무소 총무담당 부소장
Ms. Tran Nguyet Anh Assistant Program Officer
Mr. Nakayama Ryuji JICA 호치민 분사무소장
Mr. Nakamura Yoshikatsu 호치민 분사무소 프로젝트 형성자문위원(전 깐터지역 봉사단원)

■ 면담일시 : '06.9.22 오전 11시, JICA 하노이 사무소,
'06.9.25 오전 10시, JICA 호치민사무소

■ 면담내용

(1) JICA 하노이사무소

- 2004년부터 오가타 JICA 이사장은 현장중심 원조사업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직 및 업무절차 개혁을 추진해 옴. 2000년 베트남 국가지원계획(CAP: Country Assistance Program)을 만든 이후 2004년 베트남 내에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CAP를 작성하였음.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의 분권화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사업결정은 동경 본부를 통해 외무성과 관련부처에 소관으로 남아

있는 바 한계가 있음.

- 지방정부 및 부처들로부터의 개별 사업요청은 실무협의를 진행하더라도 MPI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채널을 일원화 하고 있음. 5월-6월 사이 모든 사업요청서를 MPI가 취합하고 사전 검토 후 일부 사업을 JICA에 요청하면 6월말에서 7월 말 경 해외사무소 의견을 포함하여 본부로 사업계획안을 전달하는 방식임. MPI와의 공식적인 정책대화는 일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개별 사업담당자들은 실무급 협의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음. 공관, JICA, JBIC이 함께 모여 ODA 월별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해 나가고 있음.
- 현재 JICA에서도 웹 베이스의 원조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추진 중임. 기존에는 사업수요, 프로젝트, 전문가 및 봉사단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이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연계성 및 활용도가 낮았으며 현재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 중임

(2) JICA 호치민 분사무소

- 호치민 분사무소는 2001년 신설되어 현재 JICA직원 3명과 베트남 현지직원 3명 총 6명이 근무 중이며, 남부지역 프로젝트와 봉사단원들의 관리 및 신규 사업발굴의 임무를 수행 중임. 주로 미개발지역에 대한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 달에 2-3회 정도 지방성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남부지역 자체도 워낙 넓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문협의는 쉽지 않음을 설명함.
- 내년부터 그 동안 발굴한 기술협력 프로젝트(주로 농촌개발 분야)들이 시작될 예정임. 한편 JBIC과의 통합과 관련하여 대규모 차관 프로젝트와의 연계도 확대될 전망임. 호치민 내의 JBIC 사무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례로, JBIC에서 호치민시 지하철 도입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부분에서 JICA와의 협력이 검토되고 있음.
- Nakayama 호치민 분 사무소장은 KOICA의 베트남 사업현황에 대해 특히 팀제 봉사단 활동 및 시니어 봉사단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KOICA 사업 규모에 비해 전체 임직원 규모가 매우 작은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함. JICA의 경우 현재 전체 12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본부에서도 현장중심화와 관련하여 해외사무소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함.

다.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면담자 : Mr. Lennart Nordstrom 개발협력

담당 공사

Mr. Mats Bengtsson 1등서기관

■ 면담일시 : '06. 9. 27 오후 3시 30분 하노이 스웨덴 대사관

■ 면담내용

- 스웨덴의 ODA 국별지원전략은 5-6년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지는데 국별지원 전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과의 협의 등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됨. 2004-2008년 베트남 국별지원전략이 2003년 말 채택되어 내년 1월에 중간 점검 예정임.
- 스웨덴은 베트남과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MPI의 담당관과도 매우 좋은 협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 국별계획 수립 시에도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양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베트남 측에서도 반부패(Anti-Corruption)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뢰도가 높음.
- Hansen 공사는 스웨덴의 경우, 현장의 결정권한은 큰 편이며 이를통해수원국 및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가 가능함을 강조함.
- 한편 스웨덴 원조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은 해외사무소가 담당하고 있지만 본부의 지역담당부서와 섹터(분야별)담당부서와의 협업 및 역할 분담에 있어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고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부분이 항상 가장 어려운 면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균형점 도출을 위해 성과중심적 원조수행(output 및 outcome 중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본부와 현장과의 지식 공유를 위해서 현장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보고서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시스템적으로는 내부의사소통을 위한 SIDA Inside 라는 인트라넷을 활용하며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음. 해당 년도의 국별 지원 계획 금액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본부에서는 전체 계획을 조정 관리함.

라.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 면담자 : Mr. Peter Lysholt Hansen 덴마크 대사

Ms. Nguyen Kim Quy, Programme Officer

■ 면담일시 : '06.9.28 오전 10시, 덴마크 대사관

■ 면담내용

- 덴마크의 경우 현장중심 원조수행을 위해 의사결정권을 전적으로 사무소에서 가짐. 사무소가 사업 기획과 수행을 책임지며 본부는 사업검토부분만을 담당하게 됨. 5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에 대해 연간 실행계획을 세우게 됨. 5년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발굴은 사무소에서 담당하게 되고 해당 계획을 본부에서 검토 후 의

견을 보내면 이에대한 논의를 거쳐 DANIDA Board에서 승인 후 실행하게 됨.

- 년간 실행계획은 수원국 측과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사업 구체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함.
- 본부에서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review mission을 1~2년에 한번씩 현장에 파견함.
-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온라인과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음 .(www.um.dk/da 참조, Aid Management Guideline 외.) 한편 Project Database인 PDB를 구축하여 Financial Management System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관은 사업 계획 시부터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정보는 본부 및 타 해외사무소에서도 웹을 통해 공유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예산집행실적이 연계되어있어 약정 대비 집행실적 조회가 가능함.
- 덴마크의 경우 ODA사업을 덴마크 외교정책 협의의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원조공여국 회의 및 이슈별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는 본부에서 방문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가 년에 1회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사전에 한 달에 1-2회의 수원국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있음.
- Hansen 대사는 베트남의 경우 반기별로 이루어지는 원조공여국회의 이외에 UNDP에서 개최하는 월별 공여국그룹포럼, 비공식적인 원조 공여국 대사 모임이 월별로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EU, 금융기관, 지역별, 이슈별 그룹 모임 등 다양한 차원의 원조관계자 회의가 있음을 설명하며 현장중심화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권 이양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원조 조화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음.
- 또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국별 프로그램화 시도에 대해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을 언급하였으며 KOICA에서 구축 중인 통합원조관리시스템 관련, DANIDA 역시 원조관리시스템 구축에 10년 이상을 소요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현행 시스템을 정착시켜 온 바 필요시 코펜하겐 본부를 방문하여 볼 것을 권유함.

3. 관찰 및 건의사항

■ 원조 효과성 및 원조 조화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화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관찰함. 원조 총괄기관 및 현장 원조조직 양측 모두에게 사업결정권한 없는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은 원조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분권화와 중앙집중화의 균형을 위해서 현장

중심화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현장에서 공통적인 절차를 따르되 사업선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장과 본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타 원조기관과의 원조조화 및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식/비공식 원조공여국 회의 및 모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한국의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회의 참여 및 원조 관련 월별 대사 모임에 참여를 강화하고 수원총괄 기관 및 지방 정부와의 고위 정책대화 이외의 실무 협의 채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관찰되었음.

■ KOICA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통합원조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상기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조의 현장중심화라는 정책방향을 정보시스템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건의함.

■ 아울러, 당관은 국별계획 및 중기전략계획 수립시 수원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원조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MPI 원조담당관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ODA 협의체를 활성화하며 원조공여국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임.

[자료: 주베트남대사관]

Ⅱ. JICA, UNOPS, UNV, Hellenic Aid, SDC 방문 결과 보고서

2006.11.12~12.9일간 KOICA 스리랑카 사무소에서 OJT중인 황재상 직원의 타국 원조기관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JICA

가. 방문개요

■ 방문일 : 2006.11.28 09:00~12:00

■ 면담자 : Mr. Sanada
(Deputy Representative),
Mr. Iida (Assistant Director),
Mr. Yamakaz (Assistant Director)

나. JICA 스리랑카 사무소 및 사업 현황

■ 현재 일본의 대 스리랑카 ODA는 차관 (JBIC 소관), 기술협력(JICA소관), Grant Aid (외무부 소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정부는 향후 2년 내에 JBIC의 차관(유상원조)부문을 분리, JBIC에 병합시켜 유무상 원조를 모두 JICA가 관할토록 할 예정임.

■ JICA 스리랑카 사무소의 인원은 총 14명이며 다음 6개 분야를 중심으로 40여개 사업을 추진 중임

- 인도적 지원 및 재건지원분야 : 지역공동체 농업개발 및 재건, 기초보건시설 지원 등
- 경제 인프라 개선 분야 : 교량건설, 도로운영 자문, 고속도로 실시설계, 교통안전 마스터플랜 작성, 전력계획 자문, 고체폐기물 처리 등
- 외화 획득 증진 분야 : 산업발전 자문, 기술대학 개선, e-learning 기술교육 등
- 빈곤완화(Ⅰ)분야 : 농업, 목축업, 어촌건설, 관개 및 수자원 관리 자문, 지역 생활환경 개선, 농작물 생산성 개선 등
- 빈곤완화(Ⅱ)분야 : 의료행정 자문, 보건체계 강화 마스터플랜 작성, 직업훈련 확대 등
- 재해관리 분야 : 쓰나미 피해지역 재건, 분쟁지역 공동체 개발, 재해관리 자문 등

■ JICA는 현재 스리랑카에 약 50여명의 해외봉사단(JOV)을 파견 중이며, 초등교육, 장애우 교육, 지역사회 개발, 보석 세공 기술전수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임.

■ JICA는 일본의 NGO를 통한 협력사업을 수행 중이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음.

- 매년 각 해외사무소별 수요조사 (분야별 우선순위)
- JICA 본부는 본사 및 지방지사(12개)를 통해 각 분야에 대한 NGO들의 사업제안을

접수, 사무소 의견을 참고하여 대상 NGO 결정

- 해당 NGO팀을 해당국가에 파견하여 사무소와 함께 사업세부사항 및 현지 Counterpart 결정, M/M 등 체결
- 해외사무소는 NGO들의 사업수행 과정을 감독하며, 분기별 보고 접수 및 평가실시

다. Country Program(CP) 수립

■ JICA는 일본정부의 ODA헌장과 국별 Policy Paper에 의거, 국별 CP를 수립

- 스리랑카 CP는 기초 인프라 건설과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CP 수립과정

- 스리랑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예산안 및 장기개발계획, 수요 등을 검토
- 대사관, JICA, JBIC의 담당자들이 협의하여 초안 작성 후 대사관이 본국 외무부에 제출
- 외무부는 예산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초안을 수정한 후 대사관에 송부
- 대사관, JICA, JBIC의 담당자들이 수정된 초안을 검토한 후 최종본 수립

라. 사무소 운영

■ 본부와의 전산망

- 모든 JICA 해외사무소는 JICA 본부와 "Global Network"(GN)라는 별도의 독점사용 통신망으로 연결
- GN을 통해 JICA 해외사무소는 JICA 본부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예산관리, 회계처리 등 본부와의 모든 업무를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화상회의 시스템

- JICA 해외사무소(말라위 및 동티모르 제외)는 본부 및 여타 해외사무소와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동 시스템을 국제기구와의 화상회의, 수원국 연수생들에 대한 원거리 교육 등에도 활용하고 있음.

※ 동 화상회의시스템은 GN 또는 ISDN 이상급의 인터넷 회선을 통해 운영

■ 자금운영 및 예산관리

- JICA 본부는 매달 사무소의 자금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자금을 송금하며, 사무소는 GN을 통해 본부 예산회계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예산집행의뢰서와 예산집행결의서를 작성, 집행하므로 별도의 예산집행 현황보고 등은 불요함.

마. 파견인력 안전관리

■ 안전관리 업무분장

– 사무소장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전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봉사단원의 안전은 봉사단 코디네이터, 전문가 및 컨설턴트의 안전은 각 담당자가 관리

– JICA 본부는 별도의 안전관리팀을 운영하며 각 지역별 안전관련 정보를 해당 사무소에 제공

※ 스리랑카 내 위험지역에 대한 개인적 용무의 여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무출장일 경우는 본부 또는 사무소장의 승인 필요

■ 현지인 안전관리 자문관 활용

– 안전관리 자문관(전직 경찰)은 안전담당자에게 관련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며, 신규인력 파견 시 현지답사, 주거지 안전 확인, 인근 경찰서, 군부대, 지방정부 등에 안전보장 협조요청을 수행

■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관리

– 모든 파견인력에게는 비상연락용 휴대폰을 지급하며, 휴대폰 불통시를 대비하여 콜롬보 내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휴대용 VHFS 송수신기(30Km 이내 통신가능), 지방출장 인력에게는 위성휴대폰과 HF 송수신기(차량부착, 장거리 통신가능)을 지급

– 비상사태 발생시는 휴대폰 및 SMS를 통해 파견인력의 안전을 확인하며 사전에 교육한 루트를 통해 인원 후송

– 직원 및 봉사단원, 전문가 등 모든 파견인력이 긴급후송회사 서비스 가입

2.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6.11.30 2:00~4:00

■ 면담자 : Mr. Rainer Frauenfeld (Country Director)

나. UNOPS 스리랑카 사무소 및 사업 현황

■ UNOPS는 유엔 산하의 프로젝트 수행 전문기관으로 유엔기구, 기타 국제기구, 양자간 원조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 프로젝트 관리 등을 대행함.

■ UNOPS 스리랑카 사무소의 인원은 60명 (현지인력 50명)으로 인력들은 대부분 계약직 엔지니어이며, 사업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UNOPS 사무소는 영구 상주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고 추가 사업이 없을 경우 철수 가능함.

■ UNOPS 스리랑카 사무소는 건물건축, 교량건축, 식수공급 및 농촌접근성(rural area access) 개선 등 4개 부문의 사업을 EU 등의 위탁을 받아 수행 중임.

■ UNOPS는 국제입찰, 프로젝트 공정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조기관, 수원기관, 시공업체 및 지방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거나 감독관리하고 있음.

■ UNOPS와 개발원조기관들의 협력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신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해당 위탁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함.

3. UN 봉사단 (UNV)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5.11.15 02:00~03:00

■ 면담자 : Ms. Okama Brook (Program Coordinator)

나. UNV 단원 관리

■ UNV는 봉사활동의 facilitation, promotion, networking & recognition이라는 4대 전략 아래, 국제 봉사단원과 해당 국민 봉사단원을 파견 중임.

– UNV는 봉사단원들에게 "봉사단"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UNV 본부는 전산망에 등록된 4,000명 이상의 국제 자원봉사지원자들의 지원서를 검토, 단원을 선발하며 해당국가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사업대상지에 파견

■ UNV 단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반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기관과 UNV 담당자에 의해 평가를 받음.

■ UNV 스리랑카 사무소는 각 자방의 안전담당 코디네이터들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단원들에게 매일 안전정보 메일을 발송 (Daily security report)

– UNV는 이러한 안전관련 정보를 여타 기관의 봉사단원들과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비상시에는 미리 지정된 안전장소로 대피하여 긴급후송회사(Van Breda)를 통해 후송조치

4. Hellenic Aid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6.11.24 10:00~11:00

■ 면담자 : Mr. George (Representative)

나. Hellenic Aid 및 사업현황 소개

■ Hellenic Aid는 그리스 정부의 대외부상원조 전담기구로 지난 2000년 3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던 무상원조 사업을 통합 수행하기 위해 창설되었음.

- 총 3개 부서 60여명으로 구성

■ 그리스 정부의 ODA는 주로 발칸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사무소는 남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개설된 Hellenic Aid의 사무소임.

- Hellenic Aid 스리랑카 사무소는 인도주재 그리스 대사관의 관할 아래 있으며, 신흥 원조기관으로서 사업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실험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Hellenic Aid는 주로 그리스의 NGO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NGO와 관련부서가 개별사업에 대한 MOU를 교환.

- 현재 Hellenic Aid의 주요사업은 학교 개선, 보건소 건설, 어항 및 어시장 건설 등이 있음.

5.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6.11.28 14:00~15:00

■ 면담자 : Mr.Benil Thavarasa (National Program Officer)

나. SDC 사무소 및 사업현황

■ SDC는 스위스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기구이며, 100% 스위스 정부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됨. 스위스 정부는 쓰나미 피해 이후 스리랑카에 지원을 시작함.

■ SDC 스리랑카 사무소는 현재 약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프나와 마타라에 지방 사무소를 운영 중임.

■ SDC의 조직은 인도적 지원부문과 개발협력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인도적 지원 부문은 쓰나미 피해지원 및 북동부 지역 지원, 개발협력부문은 농업개발 및 직업훈련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스위스 대사관의 인권담당 및 평화정착 담당부서와 SDC의 인도적 지원부문 및 개발협력 부문은 스리랑카 내 인간존엄성 보장이라는 최종목표를 위해 단일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SDC는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북동부 지방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주스리랑카대사관]

Ⅲ. 개발협력 동향

1. 국제기구

- '06년 OECD DAC 중견관리급회의(SLM) 및 개발 글로벌포럼 결과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개발평가네트웍 회의 결과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그리스 검토회의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체코 특별검토회의
- DAC Guidelines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2005) 요약

2. 공여국

- 제 104회 월간 공여국 포럼 참가결과 보고
- 캄보디아 원조동향 보고
- 팔레스타인 지원 국제회의 결과
- 스리랑카 원조동향 보고 ('06. 9월)
- 2006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3. 발제문 및 선언문

1) Korea's New Role in the 21st Century(21세기 국제개발원조와 한국의 역할)

- 마이클 로스코우 OECD 국제개발협력 국장

2) 한 아프리카 포럼 서울 선언문

'06년 OECD DAC 중견관리급회의(SLM) 및 개발 글로벌포럼 결과

표제회의가 OECD 회원국, WB, UNDP 등 국제기구 및 개발 NGO 참석하에 '06.12.4-6간 OECD 주관으로 파리에서 개최되었는 바, 주요결과를 아래 보고함.

Ⅰ. 주요결과 및 평가

1. 주요 결과

■ DAC 회원국들은 Non-DAC 공여국 회의 및 개발 글로벌 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여타 신흥공여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특히, 일본, 독일 등은 중국의 개발원조로 인해 기존 DAC이 구축한 개발원조관련 모범사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DAC 차원의 대책을 촉구함.

■ 원조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원조자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이행방안으로 언타이드 원조의 확대, 공여국간 권한이양(delegated cooperation)을 통한 원조조화,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를 위해 각 국이 노력해 나가기로 함.

- 효과적인 원조집행의 전제조건인 개발원조와 반부패 및 가버넌스 문제와 관련하여 수원국의 善政 구축은 공여국 시민사회, 국회 및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분야인 바, 공여국내 범정부적인 접근,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최근 HIV/AIDS 등 특정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글로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벌 프로그램의 지배구조 및 투명성 강화, 독립적인 평가체제 구축,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파리선언의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적인 원조집행이 어려운 취약국가나 분쟁 국가의 안보시스템 개혁은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 분야로서 성공적인 안보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안보시스템 개혁에 대한 수원국의 정치적인 지지 확보, 민간의 군에 대한 통제, 안보예산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논의됨.

■ 보건분야는 다양한 행위자와 원조전달 시스템 등 복잡한 구조로 인해 MDG 달성에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는 바, 보건분야 원조자금 사용에 대한 수원국의 재량 확대 및 수원국의 중장기 보건전략 및 보건 예산에 공여국의 원조를 일치(alignment on plan & budget)시키는 방안이 보건분야 MDG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거론됨.

2. 관찰 및 평가

■ 우리나라는 제2차 Non-DAC 공여국과의 정책대화를 2007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DAC과 협의하에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한 바, 미국 등 선진공여국들은 우리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함.

■ MDG 달성을 위해서는 원조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원조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각 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원조 규모 확대와 함께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조정책 수립시 우리 실정에 맞게 파리선언의 원칙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협의회를 활용하여 양자지원 및 다자지원,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무상원조 집행기관간 원조조정 노력을 강화하여 제한된 원조자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DAC은 취약국가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중인 바, 취약국가관련 논의가 여건 성숙시 대표적인 취약국가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문제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국가 이슈에 대한 DAC의 논의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Ⅱ. DAC 중견관리급회의(Senior Level Meeting)

1. DAC 의장의 Non-DAC 대표초청 오찬

■ 참석자 : Manning DAC 의장, 한국, 터키, 슬로박, 체크, 멕시코, 폴란드, 헝가리 등 Non-DAC 회원국

가. 논의 내용

■ DAC 의장은 SLM 의제에 대해 논의배경, 목적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1차 Non-DAC 공여국 회의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문의함.

■ Non-DAC 대표들은 신흥공여국들이 필요로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초청국가도 Non-DAC OECD 공여국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폴, 인도,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함.

■ 권해룡 심의관은 이스탄불 회의시 우리정부가 차기회의의 서울 개최를 제안하였음을 언급하면서 2차 회의 개최의사를 확인하였음. 아울러 중국 등 주요 신흥공여국도 초청하여 회의의 효과를 제고하자고 제안하였음.

■ Manning 의장은 2차회의를 한국에서 내년 9월경(잠정)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Non-DAC 국가들의 의견을 문의하면서 회의 상세와 관련하여 한국과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함.

2. 중견관리급 회의(SLM)

가. 12.5 수석대표초청 만찬(원조규모 확대 및 관련 이슈)

■ 원조규모 확대를 위한 중요 요소로 회원국들은 수원국과 공여국간 대화 증대, 수원국 능력배양, 가버넌스 강화, 공여국내 국민들의 지지 등을 주로 언급함.

■ 원조규모 확대 등을 위해 Manning 의장은 정보의 교환을 위해 성과 및 재원회의(Results & Resources Meeting)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지지하여 내년 2월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함.

■ 아울러 Manning 의장은 저금리 환경과 중국과 여타 공여국들이 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양허율(concessionality level)에 대해 다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일본은 동 건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DAC 업무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음을 이유로 동 작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이와 함께 WB의 성평등전략, 독일의 내년

G-8 정상회담 개최 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음.

나. 오전세션 :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한 파리선언의 이행

■ (OECD 사무차장 : 개회사) 향후 2년간 개발과 환경, 무역, 이주, 반부패 등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유지가 OECD 개발논의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OECD 개발 클러스터의 시너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예정임.

■ (호주) 최근 멜버른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파리선언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확인하였고, 아르헨티나와 인도는 최근 파리선언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호주는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원조를 언타이드화하고, 여타 공여국과 특정 공여국에 대한 권한이양(delegated cooperation)을 통한 원조조화 노력을 추진중임.

■ (DCD 원조효과작업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지역 워크샵 결과 수원국들은 언타이드화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과 수원국의 수요에 기초한 원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DAC 의장) 2001년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와 관련하여 적용국가 및 적용범위(기술원조 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 (벨기에) 파리선언은 공여국의 책임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수원국의 책임도 규정한 바,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가 필요함.

■ (미국) 수원국이 너무 높은 기대를 할 경우 공여국들은 이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수원국들도 주인의식 향상 등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수원국들은 언타이드화 관련 현지 조달확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여국의 원조관련 정보제공은 분석작업을 위해 제공되어야지 특정국가를 비판(naming & shaming)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됨.

■ (스위스) 파리선언에 규정된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파리선언은 직접자금지원(general budget support) 등 특정 원조형태(aid instrument)의 원조 효과성 측면에서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 (네덜란드) '05년 현재 25개 수원국내에서 10,837 원조시행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바,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문제가 시급하게 다룰 문제임. 원조 시행기관간 특정 공여국에 권

한을 위임(delegated cooperation)하는 형태로 원조의 조화를 이룰 수도 있음.

■ (EC) 회원국간 원조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직접자금지원이 ①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②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③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원조의 35-40%를 차지하도록 해 나갈 계획임.

■ (스페인) 언타이드화는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바, 점진적으로 언타이드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 (UNDP) UNDG 개혁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서 ①유엔의 수원국내 전략적인 단일 지원계획 수립, ②원조 조정을 위한 수원국내 조정자 임명, ③개발원조 자금지원 계획 수립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 (일본) 파리선언은 첨예한 협상의 결과물로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협상의 배경을 무색하게 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파리선언의 지표는 정량적이나 일부 수원국들은 정성적인 측면을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음.

■ (한국) 파리선언은 신흥공여국에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바,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선진공여국 및 수원국과 ODA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원조의 조화 및 일치를 기하는 등 선택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DAC 의장) 파리선언에 대한 수원국의 기대, 특히 수원국 조달시스템의 이용에 대해서는 DAC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중인 바, 조달 시스템 개혁과 언타이드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07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될 제3차 라운드 테이블 회의는 원조(input)와 결과(result)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이를 위해 통계 및 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WB) 개발 글로벌 포럼 결과 보고(상세 아래 참조)

다. 실무오찬 : 분쟁, 안보와 개발

■ (영국) 수원국의 안보시스템 개혁(Security System Reform)을 위해 개발/외교/국방(DFID/FCO/MOD)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정부적인 접근법은 정책의 일관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음.

■ (EC) 취약국가내에서 SSR은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서 성공적인 SSR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함. 수원국의 SSR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SSR을 포함한 가버넌스 개선을 보이는 수원국에 대해서 25% 원조를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SSR중 국방 시스템 개혁은 DDR과 병행하여 국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 시스템 재건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 시스템 개혁은 수원국의 문화 및 법률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이루어 져야 함.

■ (미국) 분쟁에서 벗어난 국가에 대한 SSR은 민간의 군에 대한 통제, 안보예산의 투명성 확보, 수원국 종파간 연합정부 수립시 SSR이 특정 종파 및 정당에 대한 공여국의 지지로 간주되지 않도록(impartial) 하는 것이 필요함.

■ (DAC 의장) 유엔의 평화구축위원회(Peace Building Commission) 설립은 SSR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함.

■ (프랑스) SSR은 수원국의 가버넌스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 SSR에는 국방개혁이 포함되는 관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라. 오후 세션 : 반부패와 개발

■ (영국) 개발원조관련 반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SSR과 마찬가지로 범정부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 (호주, 일본) OECD 비회원국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랑스) 반부패는 효과적인 원조전달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善政의 틀에서 이해가 필요함. 다만 惡政으로 인해 수원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스위스) 언론, 시민사회, 국회가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서 WB/OECD 등 국제기구, 양자 원조기관 등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임.

■ (캐나다) 공여국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 (한국) 부패방지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경험상 건전한 공직사회 구축은 부패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중 하나임.

■ (DAC 의장) '06년 WB/IMF 총회에서 논의된 부패방지 논의에 대해서 DAC의 논의를 추가하여 수원국의 善政구축을 위한 실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 (WB)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수원국 차원, 프로젝트 차원,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수원국 정부가 반부패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에도 국제사회는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부패방지를 위해서 ①공공 재정시스템 구축, ②조달 시스템 구축, ③지방정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마. '07년 HLM 의제

■ (DAC 의장) '07년 HLM은 개발 글로벌포럼과 연이어 개최될 예정임. 주요의제로는 ① 신흥공여국과의 관계, ②파리선언의 이행, ③가버넌스, 안보와 개발, ④ 이주와 개발, ⑤ 치안관련 지원의 ODA 적격성 문제 등이 다루어질 예정임.

■ (이탈리아, 아일랜드) 치안관련 지원의 ODA 적격성에 대해서는 미리 각 국간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DAC 의장) 파리선언의 이행은 정치적으로 공여국내 시민사회, 의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네덜란드) 중국에 대한 DAC 차원의 대응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출신용, 부채의 지속가능성, ODA 양허율에 논의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주 문제는 개발/내무부간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일본) DAC 사무국의 내년 2월 중국방문 등을 활용하여 Non-DAC 공여국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DAC 의장) 내년 9월 한국에서 제2차 Non-DAC 공여국 회의를 개최 예정인바, DAC 회원국 및 Non-DAC OECD 회원국은 물론 중국 등 BRICs, 아시아의 신흥공여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개발 글로벌 포럼에도 BRICs가 참여하도록 할 예정임.

■ (한국) 제2차 회의는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신흥공여국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DAC측과 협의하에 의제선정 등 세부일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Ⅳ. 개발 글로벌포럼

1. 12.4 보건분야 원조효과성 증진 세션

■ (의장) MDG중 3가지 목표*가 보건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건분야는 다양한 행위자, 다양한 원조채널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가 특징임.

* 아동사망률 감소(Goal 4), 모성건강증진(Goal 5), HIV/AIDS 등 질병퇴치(Goal 6)

■ (WHO) 보건분야 개발원조 지원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임. 보건분야는 ①개발원조 중단시 성과가 쉽게 reversible한 점, ②HIV/AIDS 등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과 이니셔티브가 만들어 지고 있는 점이 주요 특징임. 아울러 주요 문제점으로 ①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②높은 거래비용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따라서 보건분야는 MDG 달성 가능성, 원조 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의 이행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분야(tracer sector)임.

■ (WB) 보건분야는 공여국 시민들에게 개발원조의 성과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기회를 제공함. 최근 ① HIV/AID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 ones 이니셔티브*', ②IFFIm, AMC, UNITAID 등 혁신적인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중임.

* UNAID 주관으로 통합된 국별 HIV/AIDS 행동계획 작성, 수원국내 HIV/AIDS 조정 당국의 원조조정, 수원국내 통합 평가 시스템 구축이 주요내용임.

■ (르완다) MDG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문제가 시급하며, 공여국들은 현장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바, 지역별 · 분야별 불균형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수원국 보건정책에 공여국의 원조를 일치시키는 것임. 글로벌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재량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 (포르투갈) 수원국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prioritization & sequencing)하여 보건분야 MDG 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DAC) 보건분야가 MDG 달성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교육, 빈곤퇴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호주) 호주는 파푸아 뉴기니에 대한 원조 제공시 수원국의 보건분야 정책에 원조를 일치시키고 중기 재정운영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에 원조 자금을 계상(alignment on plan & budget)시켜 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킴.

■ (UN) 양자 및 다자 지원간 원조조화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엔도 현장에서 각 기관간 원조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Global Fund) 글로벌 프로그램과 수원국 현장에 기초한 원조(country based model)간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NGO) 보건분야 다양한 행위자는 도전이자 기회인바, 다양한 행위자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음. 다만 보건분야 일상적인 소요경비는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가 재정악화시 우선적으로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임.

■ (영국) 르완다의 경우 원조의 14%만이 수원국 정부의 관리하에 속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선언의 주요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 수원국 지방정부의 능력향상이 수원국에 대한 지원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빈번함.

■ (한국) 보건분야는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인 바, 우리정부는 항공권 연대기금을 통해 마련되는 추가적인 재원을 보건분야에도 지원 예정임.

2. 글로벌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세션

■ (DC) 글로벌 프로그램을 포함한 개발원조 재무구조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바, 동 논의 결과는 2008년 아크라개최 High Level Forum 및 2010년 MDG 중간점검에 반영될 예정임.

■ (WB) 개발원조 지원 채널이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간 원조의 조화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파리선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네덜란드) 글로벌 프로그램은 특정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 이슈가 해결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음.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폐지를 규정한 sun-set clause가 필요함.

■ (빌게이츠 파운데이션) 개발원조관련 행위자가 증대하고 있어 이들간 원조조화를 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함.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공여자간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공공재 T/F) 글로벌 프로그램은 특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HIV/AIDS 문제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임. 글로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프로그램의 지배구조 및 투명성 강화, 독립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프로그램의 개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인 포럼을 개최할 필요도 있음.

■ (NGO) 글로벌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택한 결과인 바,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수원국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미국) 글로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 프로그램들도 파리선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WB) 'Education For All – Fast Track Initiative'는 교육분야 MDG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인 바, 보건분야가 MDG 달성을 위한 시금석이라면 교육분야는 MDG 달성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NGO) 개발원조에 있어서 공여국내 관련부처의 참가, CSO 및 NGO의 참가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글로벌 프로그램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 FTI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

■ (캐나다) 개발원조의 주인의식 함양과 글로벌 프로그램은 상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IMF) 글로벌 펀드의 문제점으로 수원국들은 얼마나 많은 원조가 어떤 형태로 글로벌 펀드를 통해 지원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효과적인 주인의식을 행사하기가 어려운바,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 (모리셔스) 수원국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나, 문제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수원국의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임.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OECD 개발원조위 정례회의가 Manning 의장 주재로 9.22(금) 개최되었는바, 주요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I. 핵심요지

■ 2007-2008 PWB에 소요되는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약정이 시작되어 10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DAC 산하기구 개편은 기존체제를 대체로 유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GOVNET이 상정한 반부패 정책보고서 및 반부패 공여국 행동원칙을 서면절차를 통해 승인키로 하였으며, 식량원조의 개발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반대로 중단됨.

■ 파리클럽의 2005년 나이지리아 부채탕감의 ODA 포함문제에 대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이 부채탕감의 개발측면을 고려하여 ODA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유럽 중견국가들은 상업적 차원의 것이므로 ODA 포함 불가 입장을 고수함.

II. 상세 논의 내용

1. DAC 2007-2008 PWB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VC) 약정 :

DCD/DAC(2006)38

■ 2005년 '자발적 기여금 관리에 관한 DAC 합의'에 따라, DAC은 2007-2008 PWB에 대한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약정 창구(pledging window)를 2006.9.8-10.31간

개설하고 있으며, 금번 DAC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일차 약정 발표가 있었음.

-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2007-2008 PWB 2개년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되며, 지난 6.28 회의에서 10개로 통합된 자발적 기여금 구좌(Annex 1)를 적시하여, 사무국이 제시한 모델 계약서(Annex 2)에 따라 자발적 기여금 약정

- 2007-2008 PWB를 위해서 매년 약 550만 유로의 자발적 기여금이 필요

■ VC 서약 시한이 10월말까지인 관계로 상당수의 회원국의 입장이 미정으로 남아 있으나 새롭게 적용된 시스템에 맞추어 각국이 정해진 시한내에 약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지리 등은 2개년 약정액을 발표하였고, 미국, 스페인, 호주, 스웨덴 등은 자국 예산원칙상 1개년 약정액만 제시함. 여타국가들은 약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함.

- 각국의 약정액이 분야에 따라 과부족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장 및 사무국은 추후 회원국의 약정 현황표를 만들어 이를 조정하는 세션을 가질 예정이라 함.

■ 사무국이 'Aid for Trade' 사업를 위해 무역국과 별도의 공동구좌를 만들어 관리할 것을 제시한데에 대해 [DCD/DAC/RD(2006)10/RD5], 상당수의 회원국들은 예외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함.

2. DAC 산하기구 구조 개편(초안) :

DCD/DAC(2006)39, DAC/ CHAIR(2006)9, DCD/DAC/RD(2006)10/RD3

■ 6.28 DAC 회의에서 일차 논의 및 산하기구 의장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DAC 산하기구 통폐합에 관한 초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됨.(산하기구 mandate가 금년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구조개편을 11월 정례회의까지 완료 예정)

- 개편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6개 기구는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 : WP-STAT, WP-EFF, 평가 Network, GENDERNET, ENVIRONET, POVNET

- DAC은 동료검토, Communications, Non-DAC 공여국, 정책일관성, 원조 비구속성화, 원조확대 및 원조체제, 무역을 위한 원조를 직접 다룸

- CPDC, FSG, GOVNET의 개편
  · CPDC와 FSG 통합 방안
  · CPDC, FSG, GOVNET 모두를 포괄하는 작업반 신설 방안
  · CPDC, FSG, GOVNET와 여타 산하기구를 포괄하는 작업반 신설 방안

- POVNET에 대해서는 무역과 투자관련 이슈를 mandate에 포함시킬지 여부, 성장측면을 강조하여 "빈곤감소 및 성장"에 관한 작업반 혹은 Network으로 명칭 변경, 원조기관 비공식그룹을 포함할 지 여부 문의

- 능력발전에 관한 협의 과정 설치 여부

■ 구조개편과 연관된 systemic issues로서 DAC이 산하기구가 너무 많아 작업 결과물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산하기구가 스스로 의제를 만들어 내고 있어 DAC이 너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산하기구간 시너지 증진, DAC과 산하기구간 관계 명확화 이슈가 제기됨.

■ 대다수 회원국은 상기 6개 산하기구의 존속 및 POVNET의 이름 존속에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CPDC, FSG, GOVNET의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계속 현안으로 논의키로 함.

3. SLM 준비(회의 의제안) :

DCD/DAC/A(2006)10의 PREVIEW

- 12.5-6간 개최되는 DAC SLM(중견급 회의)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은 일단 ①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모니터링, ②Security 시스템 개혁체제 이행, 취약국가, 반부패, ③ HLM 의제 제안 등을 포함시키는 데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이주 문제(migration)의 의제 포함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나뉘었으며, 여타 의제는 삭제하자는 의견이었음.

4.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 :

COM/DCD/DEV(2006)2, DAC/CHAIR(2006)10

- 2006-2009년간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 개최 잠정일정
  · 2006.12.4-5 OECD/WB Policy Workshop('Global Programmes and the Paris Agenda')
  · 2007.4.3 제1차 글로벌 포럼('Policy Reform Options for Effective Development Finance')
  · 2008년 봄 제2차 글로벌 포럼
  · 2009년 봄 제3차 글로벌 포럼

5. 2007년도 DAC HLM(회의 일자)

- 2007년도 DAC HLM 회의 일자를 4.3-4로 확정(4.3 만찬부터 시작)

6. 반부패 :

DCD/DAC/GOVNET(2006)3/REV1, DCD/DAC(2006)40

- GOVNET은 "반부패에 관한 정책보고서" 및 "반부패 관련 공여국 행동원칙"에 합의하고 DAC에 승인을 요청

- 대다수 회원국들은 상기 문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의장은 서면절차를 통해 승인토록 하고 12월 SLM에서 논의를 위해 사무국이 요약을 작성토록 함.

7. 파리클럽의 나이지리아 부채탕감의 ODA 포함 문제 :

DCD/DAC(2006)41

■ 2005년 파리클럽의 나이지리아 부채탕감을 ODA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지난 2월 DAC 통계작업반에서 일차 논의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는 부채탕감이 개발을 위해 이루어 졌다는 측면에서 ODA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반면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화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호주는 부채탕감이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ODA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은 나이지리아 사례에 한하여 ODA 포함을 지지함.

■ 금번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는 없었으며 의견 대립의 양상을 보였음. 이에 따라 의장은 현재의 대립된 양측 입장을 그대로 보고예정이며, 11월중 추가 협의를 진행 예정이라고 함.

8. 식량원조의 개발효과 연구에 관한 Terms of Reference :

DCD/DAC(2006)31/REV1

- 사무국은 식량원조의 개발효과 연구에 대해 미국이 반대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미국은 식량원조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DAC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다루어야하는 문제로 동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개발평가네트워 회의 결과

OECD 개발원조위 개발평가네트워(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제5차 회의가 Eva Lithman 의장(스웨덴) 주재로 11.16(목)-17(금)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는바, 주요 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Ⅰ. 핵심내용

■ 원조효과의 공동평가 5개 사업 및 DAC 평가기준 및 규범 7개 사업으로 구성된 개발평가네트워의 2007-2008 PWB를 검토하였음.

■ 원조효과의 공동평가와 관련, 회원국들은 파리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평가 작업을 지지하고, 수원국의 전체 ODA 공동평가와 GBS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평가능력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됨.

■ 한편, 지난 3월 4차 회의에서 승인된 평가 품질기준이 다수 국가에서 시험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과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CPPB)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자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료검토 Framework(초안)이 소개되었음.

Ⅱ. 관찰 및 건의

■ 원조효과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원조사업 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평가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를 위한 평가 기준 및 규범이 계속 마련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금번회의에는 70여명의 평가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함.

■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DAC의 평가기준과 지침을 우리 평가제도 운용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제4차 DAC 개발평가네트워 회의에서 채택된 다음 3개 지침은 평가제도 발전에 긴요할 것으로 사료됨.

- Evaluations Systems and Use : An Assessment Tool for DAC Peer Reviews and Evaluation Managers : DCD/DAC/EV(2006)1
- DAC Evaluation Quality Standards : DCD/DAC/EV(2006)2
- Guidance for Managing Joint Evaluations : DCD/DAC/EV(2006)3

■ 또한, DAC 개발평가네트워 회의가 평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우리의 원조사업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동 회의에 참석할 것을 건의함.

Ⅲ. 상세 논의 내용

1. 의장단 선출

■ 신임 의장단으로 다음 인사들이 선임됨.

- 의장 : Finbar O'Brien 아일랜드 개발협력청 평가감사과장
- 부의장 : Dominique De Crombrugghe 벨기에 외교부 특별평가관, Belen Sanz Luque 스페인 개발협력청 개발정책평가과 팀조정관
- 신임 의장단의 임기는 금번회의 직후부터 개시

2. 2007-2008 PWB 계획안 :

DCD/DAC/EV(2006)4

■ 사무국은 우선순위평가와 약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2008 사업계획을 2개의 작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제안

- 원조효과의 공동평가(5개 세부사업) : 40만 유로 소요
- DAC 평가기준 및 규범(7개 세부사업) : 30만 유로 소요

■ 상기 2개 작업계획은 DAC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는바, 38개 제안 사업 분야 중에서 원조효과의 공동평가 사업이 6위, DAC 평가기준 및 규범 사업이 16위를 차지

■ 사무국은 상기 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의 조기 약정을 요청함.

3. 원조효과의 공동평가

■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평가 작업 (Joint Evaluation follow up to the Paris Declaration)

– 사업 추진 경과

· 파리선언은 모니터링과 함께 평가과정도 중요시하고 있는바, 평가네트웍은 3차 및 4차 회의에서 평가과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파리선언 모니터링 Joint Venture, 원조효과 작업반, 일부파트너 국가와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 2006.7 원조효과작업반(WP-EFF) 회의에서 평가네트웍 부의장은 파리선언에 따른 후속 공동평가 작업을 위한 옵션을 제시하였는바, WP-EEF 회원국들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평가네트웍이 평가과정을 진행시켜나가고, 2008년 7월 가나 개최 제 3차 고위급포럼(HLF)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에 합의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개최된 원조 효과에 관한 지역별 Workshop에서 다수 파트너국가들도 공동평가 사업에 지지를 표명함.

– 동 작업을 위해 평가과정에 4가지 요소, 즉 공동의 평가 framework의 개발, 파트너 국가 평가, 공여국 평가 및 중장기 분석 작업을 포함하는 잠정적인 접근방안이 제시되어 회원국의 지지를 받음 (평가네트웍 2006.3월 회의 및 원조효과작업반 7월 회의)

· 동 사업의 팀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덴마크는 2007-2008년간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Reference Group과 Management Group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며, 회원국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함.

· 동 공동평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해온 파트너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세네갈이며 잠비아, 남아공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소개함.

– 대다수 회원국들은 동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특히 Reference Group(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과 Management Group(덴만크, 네덜란드)에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국가(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독일, 캐

나다)는 재정적 기여를 약속함.

■ 수원국의 총 ODA 공동평가 (Joint Evaluation of Total ODA at the Country Level)

-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 2004년 11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은 수원국 국가단위의 ODA 전체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해 공동의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진행되지 못함.
  · 이에 따라 스웨덴이 사업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검토키로 한바, 스웨덴은 예비적인 기술평가결과를 2006년 평가네크웍 회의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관심 파트너 국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합의함.

- 수원국의 전체 ODA 평가사업은 공여기관의 개별적인 평가횟수를 감소시키고, 개발협력 거래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으므로 파리선언의 원칙에 부합되는 평가이며, 수원국가와 외부 공여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공동평가 기구를 만들어 평가 수행 가능
  · 국가개발의 시각에서, 개발영향에 초점을 두고, 개별 공여자의 기여보다는 공동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평가

- 스웨덴은 2006년 10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관심 공여국 회의에서 아프리카 1개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부르키나파소, 가나, 말리, 모잠비크, 잠비아 등 5개 대상국 중 잠비아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함.

- ADB는 아프리카 사업과 병행하여 ADB와 WB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평가 사업의 진전 현황을 보고함.

■ GBS 공동평가 후속점검(Follow up to the Joint Evaluation of General Budget Support)

- GBS Report (The Joint Evaluation of General Budget Support : 1994-2004)는 24개 공여국과 7개 파트너 국가(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 말라위, 루안다, 우간다, 니카라과, 베트남)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며 2006년 5월 발간됨.
  · 동 보고서는 2006년 5월 OECD 정책결정자 설명회(Dissemination Conference)에 제출되었으며, 5월 DAC 정례회의, 7월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 검토되었는바, 향후 평가네트웍이 평가에 대한 각국의 관리상의 조치 및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함.

- GBS 평가를 이끌어 온 영국은 후속 모니터링 과정도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관

리상의 조치를 2006년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07년 및 2008년에 각각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함.

■ 평가능력개발(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 일본은 파트너국가의 평가능력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공여국 및 기고나의 ECD 지원 현황, ECD 원조전략 및 정책, ECD를 위한 예산배분, ECD의 평가, 주요 과제 및 제약요인, ECD 촉진 방안 등에 대해 조사

- 회원국들의 평가능력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따라, 일본 주도로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Task Force에 관심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요망함.

4. 평가 기준 및 규범

■ 평가품질기준 적용

- 제4차 개발평가네트워 회의는 평가품질기준(DAC Evaluation Quality Standards)을 승인하고 향후 3년간 적용 시험기간을 갖기로 하였는바, 회원국들이 발표한 동 기준 적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동 기준을 그래도 사용하는 국가와 자국 실정에 맞추어 사용하는 국가가 있으며, 포르투갈, 뉴질랜드,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캐나다, EC 등이 현재 어떤 형태로든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함.

■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

- 세계은행(WB)의 독립평가그룹(IEG)은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개념과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향후 영향평가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act Evaluation)을 성안하는 작업 등을 제시하였는바, 의장은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함.

■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CPPB) 평가 지침의 개발

- 노르웨이는 DAC CPDC와 합동으로 "DAC guideline for Evaluating CPPB Activities" 개발을 위해 11.20~21, 양일간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Workshop에서 접근방법 보고서 초안(Draft Approach Paper)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 세계 및 지역 파트너쉽 사업(GRPPs)의 평가

- 세계은행은 독립평가그룹(IEG)이 작성한 세계 및 지역 파트너쉽 사업의 평가원칙과 기준 초안 (Draft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of Globl and Regional Partnership Programs)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함.

■ 다자기관의 성과 평가(Performance Assessment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 사무국은 다자기관의 성과평가 관련,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하에서 개최되는 workshop 및 전체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2007년 1월 29~30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전문가 workshop을 소개함

바. 다자평가시스템(Multilateral Evaluation Systems)

- 국제기구 평가를 위한 동료검토가 시범적으로 UNDP 및 UNICEF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DAC 개발평가네트웍과 UN 평가그룹(UNEG)이 Joint Task Force를 설립하여 동료검토 Framework을 개발하기로 하였는바, 다음 두 가지 문서가 마련되었음
  - A Joint Initiative of the DAC Evaluation Network and UN Evaluation Group
  - A Framework for Future Peer Reviews (draft)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그리스 검토회의

OECD DAC(개발원조위) 그리스 검토회의가 11.22(수) Manning 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는바, 주요 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그리스는 1999년도 DAC 가입 이래 두 번째 동료 검토이며, Stylianidis 외교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뉴질랜드와 룩셈부르크가 주검토자로 참여함.

Ⅰ. 핵심 내용

■ 개발원조위(DAC)는 그리스 정부의 원조정책 및 시스템 강화 노력과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재난 발생시 보여준 인도적 지원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리스의 원조가 주로 발칸지역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 외에도, 해운국가로서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인도적 지원에 장점이 있다고 평가함.

■ 그리스의 개발원조 규모는 2004년 3.21억불 GNI의 0.16%로서, DAC 가입시 설정한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며, EU가 약속한 2010년 0.51%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리스의 2007-2011 제3차 개발원조계획에 연도별 원조확대 목표 등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 그리스는 ODA 외에 알바니아 등 주변국가로부터의 이주자들을 위한 교육 및 보건서비스에 GNI의 0.07%에 해당하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동지원분도 ODA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무국 및 여타 회원국은 현재 DAC의 통계

기준으로는 ODA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Ⅱ. 상세 회의 내용

1. 전반적인 구조 및 정책방향

■ 검토자들은 그리스가 원조 소국으로서 발칸지역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으며 주변국으로부터 이민의 증가, 밀거래 성행의 문제해결이 필요하고, 2010년도 EU의 원조규모 목표 GNI 0.51%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규모보다 3배를 증액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제3차 개발원조계획의 작성에 이를 감안하고, 고위급의 정치적 성명 발표, 의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함.

■ 회원국들은 그리스가 소규모 공여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가 적은 만큼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함.

■ 그리스는 UN MDG의 달성, EU의 지침, 국내적 필요, DAC의 권고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올림픽을 계기로 개발원조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함. 구체적으로는 개발원조에 관한 부처간 조정이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상의 정치적 성명 발표, 발칸지역의 인프라 건설, 3차 개발원조계획 작성, 소규모 공여국으로서 보다 집중된 프로그램의 마련, 새로운 입법, 개발인력의 훈련(화란 및 미국의 협조)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DAC은 그리스가 상대적우위분야를 반영한 명확한 원조전략 따라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원조 규모, 원조 대상지역, 원조방법 등의 변화에 따라 의회의 지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2. 원조의 규모 및 배분

■ 검토자들은 그리스의 2004년 원조규모가 3.21억불로서 GNI의 0.16%이며, 이는 2004년도 DAC 회원국 평균 0.26%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2010년 EU 목표치 0.51%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인 12억불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함.

– 이와 관련, 그리스는 GNI의 0.07%에 이르는 많은 규모의 재원을 알바니아인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바, 빈곤인접국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시범사례로 이를 ODA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

였으나, 사무국은 현재의 DAC 통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별첨 사무국 입장자료 참조)

- 그리스의 원조 지역은 21개 우선대상국 특히 발칸 및 흑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자원조의 경우 감소추세이며 90%가 EC에 집중되고 여타 국제기구에는 소액만 기여하고 있어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함.

■ 회원권국들은 알바니아인에 대한 교육지원의 ODA 포함문제 대해서는 사무국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통계작업반에서 향후 통계기준의개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화란)

- 기타 원조지역의 편중, 다자원조의 국제기구별 조정 문제 등을 지적함.

■ 그리스는 알바니아인에 대한 교육지원이 ODA 통계기준에 합치된다고 주장하고 회원국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그리스의 상대적 이점을 살려 발칸, 중동, 흑해지역에 대한 원조의 지속, 다자원조의 다변화 계획 등을 설명함.

■ DAC은 그리스가 중기 지역적 전략을 세워 주요 파트너와의 사업지속 필요성과 아울러 이중 일부국가가 장차 ODA 졸업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정해야 하며 EC외의 다자기구에 대한 원조 비율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3. 정책 일관성의 촉진

■ 검토자 및 회원국들은 그리스가 이민, 인간거래, 돈세탁, 환경분야 등에서 효과적인 전정부적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부처간 조정을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부처간 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식구조 확립, Hellenic Aid의 분석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함.

■ DAC은 정부 목표로서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강화가 필요하며, 부처간 조정을 위한 공식체계의 기반 확립, Hellenic Aid의 분석능력 향상을 권고함.

4. 원조의 관리 및 집행

■ 검토자 및 회원국은 외교부가 의장인 부처간위원회가 있으며, 외교부 산하 Hellenic Aid가 원조 집행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조 프로그램이 12개 부처 17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양자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그리스 개발원조의 조정기관으로 2002년 설립된 Hellenic Aid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재 38명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NGO를 원조와 관련, 능력있는 NGO

를 선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NGO 선발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함.

- 그리스는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NGO를 선발하고 있음을 설명함.

■ DAC은 개발협력시스템의 통합화를 추구하고, 2002년 설립당시 계획했던 Hellenic Aid의 조직을 모두 갖추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지향적 접근방법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5. 인도적 원조

■ 검토자 및 회원국은 그리스가 인도적 원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쓰나미 사태 등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전략문서가 마련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함.

■ 그리스는 세계적인 해운국가로서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한 신속한 인도적 원조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 인도적 원조 분야는 그리스가 장점을 가진 분야이자 성공적인 분야라고 강조하고, 쓰나미, 레바논, 파키스탄 지난지원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DAC은 정부내 공식 인도적 원조 조정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전반적인 인도적 원조 전략 개발, 재외공관의 재난 구호 능력의 향상, NGO의 인도적 지원 참여절차 개선 및 능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DAC(개발원조위원회)의 체코 특별검토회의

1. 체코의 특별검토 추진 경위

■ 2006.5월 체코측, 사무국에 약식 DAC 검토('mini Peer Review') 요청

■ 2006.6월 DAC회의에서 체코의 약식검토 요청을 지지
- 다만 표준 Peer Review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하고, 사무국의 재원이 사용되어서도 안된다고 지적

■ 2006.9월 Terms of Reference 작성 완료
- 작업내용은 상당히 간소화된 검토이나 기본적으로 DAC Peer Review에 기초

2. 구체적 작업내용

■ 제 1단계 : 체코정부가 개발협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정보를 담은 메모렌덤을 사무국에 제출
- 체코 개발협력의 근간(법률, 정책, 공공 및 정치적 지지)
- 국가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범위
- 개발협력을 위한 국가 시스템의 조직과 관리
- 정부측에서 검토팀이 제기해 주기를 희망하는 질문 목록

■ 2단계 : OECD 검토팀의 체코 방문 조사활동
- 검토팀 구성 : 2명의 회원국의 동료검토 전문가, 사무국이 검토를 위해 채용한 직원 및 사무국 담당직원
- 체코 정부는 검토팀을 지원할 전문인력 제공
- 검토팀은 체류기간중 4일간 체코정부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정부 관계자, 민간대표자(NGO, 민간부문, 학계 등)와 면담하고 그 결과를 체코측에 간략히 설명

■ 3단계 : 검토팀의 보고서 작성
- 20-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체코의 개발협력 시스템의 전반적 성격을 기술하고, 주요 문제점(Main Findings)과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명시
- 동 보고서는 체코정부의 내용 확인후 회원국에 배포되며, 회원국은 이에 대해 간략한 서면입장 표명 가능

■ 4단계 : 체코 프라하에서 검토회의 개최
- 검토회의에는 DAC 회원국 및 옵서버 모두 초청되며, 보고서의 Main Findings 및 Recommendations에 대해 논의

3. 작업일정(안)

■ 2006.9.15 체코정부의 메모렌덤 접수
■ 2009.9.30 검토팀 구성
■ 2006.11월 검토팀의 체코 방문 조사활동
■ 2006.12.20 검토팀의 보고서 초안 완료
■ 2007.1.31 최종 보고서 완료
■ 2007.2월말/3월중순 프라하에서 검토회의 개최

4. 예산(안)

■ 소요예산은 체코정부와(혹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 소요내역은 검토작업을 진행할 인력채용, 기타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소요액은 52,624 유로
- 동작업에 참여하는 개발협력국 직원의 체코 방문관련 비용은 상기 예산에서 지출
- 상기 예산에는 회원국 검토자에 대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음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DAC Guidelines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2005) 요약

1. '안보 시스템 개혁과 가버넌스' 채택

■ 2004.4.14-16 DAC 고위급 회의에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인간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안보 시스템 개혁(Security System Reform)에 관한 '안보 시스템 개혁과 가버넌스: 정책과 올바른 실행' 채택

■ 동 정책 보고서는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으로써 안보 시스템 개혁(SSR)이 민주적, 평화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불안정, 분쟁과 취약한 가버넌스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

- SSR의 기본 원칙, SSR 활동에 대한 10개의 권고 조항 포함

2. 세부 내용

■ SSR 이행을 위해서 가용한 정책과 재원 및 도구를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 바, 개발, 외교, 무역, 재무, 투자,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틀과 절차가 필요

■ 효과적인 SSR 수행의 지침

- SSR의 핵심은 사람중심, 주인의식, 민주적 원칙, 국제인권 원칙과 법의 원칙에 입각함으로써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조성에 기여
- 각종 안보문제 논의의 바탕이 되는 틀로써의 역할
  · 정부, 국제기구, 시민 사회 등 다자간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

-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모든 책임과 투명성, 특히 시민 사회의 감시가 동일하게 적용
- 안보의 국가소유 개념과 정책적 · 제도적 틀, 명확한 정책과 강력한 거버넌스, 적용과 범위에 관한 제도적인 절차 수립 등 안보 시스템의 기본 요건 충족

■ 안보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범적부적 접근 방법

- 정부와 모든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틀 마련
- 공동 출자의 재원을 이용하는 방법 (예: 영국정부는 Global Conflict Prevention Pool 및 African Conflict Prevention Pool을 설립하여 국방부/외무성/국제개발부간 공동 재원 마련)
- SSR 전략이 요구하는 원조의 전달하는 적절한 경로 마련(예: 영국-Defence Advisory Team(DAT)을 통해 안보와 관련된 개혁을 지지하고 도움을 제공)

■ 원조 제공 프로그램 발전 방향

- 각 프로젝트나 원조가 전반적인 프로그램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 안보에 관한 지역적, 국제적 관점을 반영
- 안보 문제는 국가 주권과 연관되어 개도국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외부 원조에 대한 저항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현지 관계자들과의 교섭 필요

■ 개혁 수행의 성공여부의 관건은 주인의식이므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현장에서 개발되고 실행단계에서 상황 및 여건에 맞게 적용
- 공여국이 현지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혁에 대한 주인의식 에 현지 투입이 증가하도록 노력 필요

■ 전반적인 국가 역량 강화는 안보 시스템 가버넌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므로 안보 시스템 검토와 평가 장치, 안보 지출의 관리, 안보 분야에의 시민 사회의 자문, SSR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와 역량 강화, 적합한 사법 제도, 시민 사회의 감시 절차 등 발전 필요

■ SSR의 범위와 정의에 아래 평화수립 활동과 비무장화 권고

- 각종 분쟁과 전쟁 등에서 평화와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을 위한 평등한 합법적 권리 보장
- 개발과 정치적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목 달성을 위한 민간의 안보 재원 사용 허용
- 휴대용 무기 규제

- 과거 전투병들에 대한 제대, 무장해제, 사회 적응, 정착 및 송환
- 아동 군인에 대한 예방과 보호
- 전쟁을 야기하는 사회의 경제구조 개편 (자금 세탁, 국제적 부정부패, 불법 무역 등)

■ OECD 비회원국들의 관점

- 공여국 원조의 기본적인 틀로써의 SSR보다 자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는 경우 SSR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OECD 회원국들은 SSR 파트너 국가와 협조해야 하며, 개도국의 정치적, 제도적 상황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

- 공여국과 SSR 파트너와의 계속적인 의견 교환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책 성공 가능

3. 사례 분석

■ Annex 4.A1의 아프리카의 안보 시스템 개혁

- 아프리카의 5개 지역 53개국 중 43개국에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안보 개혁을 실시
- SSR 시행에 있어 정치적, 재정적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고 SSR이 다른 개혁의 일부로만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략적인 기본 틀이나 법 제정이 미비 했으며 협상이나 토론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과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극소
- 민주적인 방법의 안보 개혁으로 점차 발전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베넹, 세네갈, 가나가 있으며 아직도 군에 의존하는 강제적 안보 체계에 시달리는 토고, 카메룬, 기니아, 케냐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간에 위치

■ Annex 4.A2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시스템 개혁

- 아시아 태평양의 4개 지역 26개국을 조사한 결과, 가버넌스가 중요시되는 와중에도 안보 시스템 가버넌스는 미약하고 군의 통제력 또한 아직 강력
- 외부의 국제 개발 기구, 정부, NGO 등이 정부의 개혁 아젠다에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Annex 4.A3의 라틴 아메리카 - 카리브해 안보 시스템 개혁

- 4개 지역 26개국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안보 개혁이 시행
- 안보 개혁은 단편적이고 임시적일 경우가 많고 개혁 참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부족으로 인한 추진력 결함, 기술적, 원칙적 분야의 전문적인 민간 참여와 전체적인 국민 참여 의식 부족, 단기적인 정치 목표 등이 걸림돌로 작용

■ Annex 4.A4의 발틱,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동남 유럽 안보 시스템 개혁

- 3개 지역 18개의 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가 해제됨으로써 안보 체제에 군의 영향력 또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안보 체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모
- 특히 발틱 지역의 나라들과 슬로베니아에서 안보에 대한 넓은 개념이 형성되면서 경제적 발전, 사회적 안정, 법의 제정 등에 긍정적 영향
- CIS와 동남 유럽에서는 약한 경제 인프라 기반,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변화에 대한 장기적 계획 부족으로 인해 개혁의 속도가 비교적 완만.

제 104회 월간 공여국 포럼 참가결과 보고

표제회의(104th Monthly Donor Group Forum)가 '06.9.19 주재국내 주요 원조공여국, 국제기구 및 NGO 대표 등 40여명과 베트남 내무부 차관(Mr. Thang Van Phuc)이 참석한 가운데 UNDP 베트남 사무소 주관으로 하노이에서 개최되어 당관에서 참석 후 그 주요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시 : 2006년 9월 19일 12:00
- 장소 : 하노이 UNDP 회의실
- 참석자 : 주베트남대사관 유연철 참사관, KOICA베트남사무소 최문정부소장, 김현원 직원
- 회의주제 : 베트남 공공행정개혁(PAR : Public Administration Reform)프로그램의 추진현황

2. 회의 내용 요지

- 표제회의는 금년 5월 새로 부임한 UNDP사무소 Mr. John Hendra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재국 내무부 Phuc 차관의 공공행정개혁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PAR)프로그램의 성과 및 진전,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으며, 주재국측의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의 질의 및 주재국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음.
- 동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대사관 유연철 참사관은 한국정부는 주재국 PAR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ODA사업을 수행해 왔음을 언급하고, 특히 올 10월 KOICA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PAR관련 주재국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베트남 공무원행정 발전』연수 실시 예정임을 소개함. 또한, 2006-2010년 PAR 2단계 계획에서 전자정

부(e-Government)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함.

■ 이에 대해, Phuc 차관은 그간의 한국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지난주 Asian Forum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공공부문 개혁의 노하우와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구축 등의 분야에 대해 한국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답변하였음.

3. 공공행정개혁(PAR)프로그램 추진 현황

(주재국 내무부 차관 발표 요지)

■ 베트남 정부는 2001년-2005년까지의 PAR 1단계를 평가하고 2006년-2010년의 2단계 PAR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의 개정도 진행 중임.

■ PAR 프로그램 2단계에서는 공공행정의 질적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고양시키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관료주의를 철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일례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처 및 기관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One Stop Shop Model'을 파일럿 프로젝트로 실시하여 확대적용 계획 중임.

- 하이퐁시를 선두로 다낭, 컨터, 롱안성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예정

■ 아울러, PAR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이 시장경제로 전환을 실행하는 데에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함.

- 공공행정의 변화관리제도
- 공공행정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구축
- 공무원 역량강화
- 공공행정의 현대화(투명성제고 및 전자정부 구축 포함)
- PAR 이니셔티브 지원
- 자문위원회 그룹 구성

4. 기타사항

■ 베트남대사관은 현재 반기 및 연말에 실시되는 원조공여국회의를 중심으로 ODA관련 회의 등에 한정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향후 원조사업의 질적 제고 및 효과적인 Sector Approach를 위해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포럼 등에 우선적으로 적극 참여, 우리나라 ODA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재국내 타원조기관들과의 원조조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끝.

[자료: 주베트남대사관]

캄보디아 원조동향 보고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9.12(화) Chhieng Yanara 사무총장 주재하에 캄보디아 개발협력 포럼 출범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등을 목적으로 공여국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주요사항 아래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시 : 2006.9.12(화) 15:00~16:00
- 장소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CDC)
- 참석기관 : KOICA, UNDP, JICA, DANIDA, World Bank 등
  캄보디아 외교부 등 주요 부처 차관 참석

2. 회의배경

- 캄보디아 정부는 2006.3.2. 원조공여국회의(CG, Consultative Group) 에서 수차례의 원조공여국 회의(Consultative Group) 공동의장직 경험을 바탕으로 원조공여기관과의 협의시 캄보디아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상기관련, 캄보디아 정부는 원조공여국 회의(Consultative Group) 를 2007년부터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 Cambodia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orum)으로 전환키로 결정함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에 속한 캄보디아 복구개발위원회(Cambodia Rehabilitation& Development) 는 동 포럼 출범을 위하여 실무검토를 실시하였으

며, 캄보디아 정부는 동 실무검토(안)을 바탕으로 현재 원조공여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에 있음

- 의견수렴 내용 :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 절차, LDF (Leading Donor Facilitator) 및 캄보디아 정부의 역할분담, 기술실무위원회(TWG) 및 정부 · 공여국간 협력위원회(GDCC)의 상관관계

■ 금번 공여국회의도 캄보디아 정부의 원조공여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의 최종의견 취합후 정부 내부절차를 거쳐 2006.10.5 정부 · 공여국간 협력위원회(GDCC) 회의 시 포럼 출범 관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3. 주요 쟁점사항

■ UNDP측에서는 동 포럼 관련 캄보디아 정부의 단독적인 지표개발을 지양하고, 개발파트너(Development Partners)와의 협의 및 합의하에 공동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할 것을 건의함

■ 캄보디아 정부 및 공여기관 대다수가 신흥공여기관(emerging donors) 의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에 대한 참여확대는 환영하였으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동 포럼 참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 ADB 등 일부 공여기관들은 시민사회의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시민사회의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 참여를 건의함.
- 그러나, Eiichiro Hayashi JICA 협력조정 자문관은 캄보디아에는 수많은 시민사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지원공여주체 (main sources)가 아닌 집행자(executing agency)인 점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의 동 포름 참여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함.

■ UNDP 등 일부 원조공여기관은 캄보디아 정부의 원조공여 총액 대한 공식발표 이전에 공여기관별 지원공약 발표를 건의함

4.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 주요내용

■ 2007년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이 최초로 개최될 예정이며 캄보디아 정부가 의장직을 맡고, 캄보디아 복구개발위원회(CRDB)는 캄보디아 정부의 조정기구로서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 준비 및 조직관련 주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세계은행은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의 Lead donor Facilitator (LDF)로서,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의 사무국인 캄보디아 복구개발위원회(CRDB)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LDF 또는 타 원조공여기관은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 준비 및 조직을 위하여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 사무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LDF를 통해 원조공여기관과의 협의 및 합의하에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의 개최시기, 의제, 형식 등을 확정함
-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의 이해제고를 위하여 협력사업의 진행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며, 아울러 원조공여기관도 동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 및 평가보고서(분야별/주제별 평가보고서 등)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캄보디아 복구개발위원회(CRDB)는 LDF와의 협력하에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DCF) 개최 전 지원공약서를 준비, 배포할 예정이며, 개발협력포럼 종료 시 원조공여기관의 지원공약 총액을 집계하여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발표하게됨
- 캄보디아 복구개발위원회는 LDF와의 협력하에 언론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포럼 폐회식 전 참석기관 대상 동 자료를 배포함
- 캄보디아 개발협력위원회 의장이 폐회식에서 포럼 중 진행된 논의 사항을 요약 발표하며, LDF는 원조공여기관을 대표하여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 및 평가내용을 발표하게 됨.

[자료: 주캄보디아대사관]

팔레스타인 지원 국제회의 결과

최근 레바논 사태와 더불어 악화된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5개국 및 국제기구(약 20개)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표제회의가 스웨덴 · 노르웨이 · 스페인 정부 공동주최로 9.1(금)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바, 동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1. 회의 주요결과

■ 금번 회의에 참석한 팔레스타인(Abbas 수반 경제보좌관) 및 UN 대표(Egeland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 등) 등은 팔레스타인의 만성적인 위기상황이 최근 보다 악화되었음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팔레스타인은 전 인구의 70%가 빈곤상태이며 특히 전기 · 식수 · 식량 ·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UN 합동어필(CAP)의 31%만 지원된 상태임.

■ 금번 회의에 참가한 많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바, 동 회의를 통해 총 2억불 이상의 신규 지원서약(pledging)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CAP에 대한 추가 지원액이 55천만불에 달함.

– EU(5천만유로), 독일(4.2천만유로), 노르웨이(8백만불), 미국(5백만불), 스페인(3백만유로) 등 서약

– 사우디아라비아는 금번 회의와는 별도로 2억 5천만불을 기서약 발표

■ 특히 EU는 7.26 개시된 대팔레스타인 임시국제지원계획(TIM; Temporary International Mechanism)의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총 9천만유로를 TIM을 통해 식

수 · 보건의료 · 실업문제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팔레스타인 위기에 대한 유일하고 항구적인 해결책은 정치적 해결뿐이며 단기 인도적 지원 이후의 팔레스타인 중장기 발전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 특히 당면한 현안인 공무원 임금체불 · 정치인억류 · 지원물자 접근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함.

2.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 요지

■ 유 차관은 최근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 현 상황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아울러 그간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 교육시스템 개선사업' 등 UNDP와의 공동사업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총 12백만불을 지원하였음을 설명하고 특히 2005년에는 2006-2008간 총 6백만불을 지원하기로 서약하였다고 밝힘.

– 현재 제한적인 범위에서 동 지원프로그램을 이행중인 바, 팔레스타인의 상황변화에 맞추어 조속히 지원약속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3.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대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한 가자지구에 대한 접근문제(denied access)가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공감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에까지는 이르지 못함.

■ 동 접근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팔레스타인 지원에 있어 CAP · TIM 등 다자지원 매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우리 정부도 동 다자채널을 적의 활용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 고위인사가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팔레스타인 지원 현황과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한 바, 이를 통해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연대를 과시하고 대중동 외교기반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 주스웨덴대사관]

스리랑카 원조동향 보고('06. 9월)

표제 관련, 선진원조국 등의 '06. 9월 중 대주재국 원조동향을 아래 보고함.

1. 덴마크

가. 캔디지역 수자원 프로젝트 지원

■ 덴마크 정부는 스리랑카 중부 캔디 지역의 Kadugannawa, Sunyagoda 등 15개 마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규모 수자원 개발 및 관리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함.

■ 총 $72,500,000 규모의 금번 프로젝트는 덴마크 정부 및 스리랑카 정부가 각각 $49,750,000 및 $22,750,000을 부담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3개의 정수공장 건설, 8개의 저수지 공사, 송수관 건설 및 수자원 관리 정부 부처 직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사업 등 단위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2.미국

가. USAID, 평화정착 사업 일환으로 예술 공연 지원

■ USAID는 평화와 개발이 별개일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03년 이후 주재국 평화정착을 위한 특별지원반을 구성, 그간 580여건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5백만 불 상당을 지원해 왔음.

■ 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금번 공연은 무슬림, 타밀 및 싱할라족들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고, 내전으로 피폐해진 민생의 삶을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내용의 무극(舞

劇), 연극 및 비디오 영상물 상영 등으로 구성되었음.

나. USAID, 평화의 날 행사 지원

■ USAID는 9.21 "국제평화의 날"을 맞아 동북부 정부군-LTTE간 교전 지역 중 한 곳인 트린코말리에서 평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함.

■ 트린코말리 시내를 중심으로 한 전역에서 평화의 종 울리기, 평화 깃발 달기, 현수막 게양 등을 통한 평화촉구 행사를 펼쳤으며, 특히, USAID의 소규모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 받은 동북부 지역 부녀자들과 소녀들이 트린코말리 행사지역에 모여 군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꽃을 달아주는 행사를 펼쳐 지역주민 및 군인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음.

3. 일 본

가. JICA, 웹기반 연수과정 제공

■ JICA가 콜롬보 대학 컴퓨터학과(University of Colombo, School of Computing)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IT 분야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웹기반의 제3국 연수과정이 9.4부터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진행됨.

■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금번 "Interactive Multi-media of E-learning content, Design and Development" 연수과정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14개국 16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됨.
- 대상국 : 네팔, 라오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캄보디아, 케냐, 탄자니아, 파키스탄

■ 참고로 JICA는 2003-2005년간 현지연수 및 제3국 연수의 형태의 IT 교육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5년간 2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음.
- 연간 2개 과정의 현지연수(In-Country Training Program)와 1개 과정의 제3국 연 수 (Third-Country Training Program) 실시

4. 캐나다

가. CIDA, 쓰나미 피해지역에 사회복지센터 지원

■ CIDA는 쓰나미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파나두라, 자프나, 킬리노치치, 모네라갈라 및 푸탈람 등 지역에 28개의 "사회복지센터"를 지원하며,

2007년 중 32개의 센터를 추가 지원할 예정임.

■ 동 지역별 복지센터에는 주재국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및 "아동개발, 여성부(Ministry of Child Development & Women's Empowerment)" 소속의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들이 배속되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예정임.

■ CIDA는 센터 지원과는 별도로 캐나다 "Queen's University"와 공동으로 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자료: 주스리랑카대사관]

2006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표제 회의가 2006.12.14-15간 주재국 정부 및 세계은행(WB) 주관하에 30개국, 16개 국제기구 및 NGO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바, 동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함.

I. 핵심 요지

1. 주요 결과

■ 금번회의시 베측에서는 원조공여국 역사상 최초로 총리가 참석하였으며 기획투자부(MPI)장관등 5개부처 장관 및 관련기관 차관등이 참석 · 발표를 통해 베트남으로서는 금년도에 '06-'10 사회 · 경제 개발계획(SEDP)상 2006년도 주요 목표치를 달성하였다고(경제성장률 8.1% 등)하면서 APEC의 성공적 개최 및 WTO 가입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함

- 또한, 금년도에는 기업법 · 투자법 · 환경보호법 · ODA의 효율적 활용 관련 법령 등 각종 규정이 제정 · 발효되는 등 경제 · 사회 · 환경 · 사법분야에서의 개혁 노력을 설명함.
- 특히 베측은 ODA의 효율적 활용 및 운용을 위해 Decree 131가 제정('06.12.7발효)되었다고 하면서 ODA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권한이양(Decentralization), 절차간소화, 타 법률과의 일관성 제고,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강화 등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함.

■ 공여국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2005-06년간 베트남 정부가 제반 분야에서의 법률 정비

를 통한 각종 개혁 노력을 평가하면서 경제 성장률(8.1%) 및 빈곤률(19%)감소 등 금년도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음을 평가함.

- 또한 각국은 베트남 정부가 금년도 APEC의 성공적 개최 및 150번째 WTO 가입국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의 향후 도약을 기대한다고 표명
- 한편, 각국은 베트남이 경제의 양적 성장 및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도 아울러 고려해야할 시점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2006-2010 사회경제 개발계획(SEDP)상의 사회통합, 환경보호, 거버넌스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임을 권고

■ 2007년도 공역국들의 대 베트남 지원서약(pledge) 총액은 44.5억불로 전년 대비(37.5억불) 18.7%(약 7억불)증가함.

- 일본(8.9억불), 프랑스(3.7억불), 한국(1.1억불) 및 ADB(11.4억불), WB(세계은행, 8.9억불) 등 서약(상세내역 별첨 참조)

2. 관찰 및 평가

■ 금년도에는 지난 6월 중간연도 원조공여국 회의시 부총리겸 외교장관이 최초 참석한데 이어 금번회의시에는 총리가 원조공여국회의 역사상 최초로 참석한 바, 이는 베트남의 사회 · 경제발전에 있어 ODA에 대한 매우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재국은 당초 계획했던 회의일자(12.13-14)를 변경하면서까지 총리의 참석을 추진

■ 또한 금년도는 지난 4월 제10차 전당대회시 승인한 2006-2010 사회 · 경제개발계획의 첫해로서 경제성장률 및 빈곤감소율 등 각종 목표치가 달성되었으며

- 대내적으로는 제반분야에서의 개혁 노력을 통한 각종 규정의 정비 등 사회 ·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 대외적으로는 APEC의 성공적 개최 및 WTO 가입을 통한 지역적 · 국제적 통합에 진일보한 바,
- 금년도는 베트남의 도이모이(개혁 · 개방) 정책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가히 베트남의 해(Year of Vietnam)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이에 원조공여국들은 총 44.5억불의 지원서약을 하여 베트남 원조공여국회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이는 원조공여국들이 베측의 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서약액은 주재국의 기대에도 부응한 것으로 사료됨.

* 주재국 Khiem 부총리겸 외교부장관은 지난 12.13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시 향후 5년간 사회 · 경제개발을 위해 약1,400억불이 필요한 바, 이중 1/3(5년간 약470억불)을

외부로부터 유치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조공여국들 및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음.

- 금번 원조공여국들의 서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양자 차원에서 일본 · 프랑스에 이어 제3위의 원조공여국이 되었으며(작년도 4위)
- 중국의 서약불참(작년도 2억서약, 3위) 및 ADB의 서약액 증가(작년도 5.4억불에서 금년도 11.4억불)가 주목되는 바
- 우리로서는 동 배경 등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베트남 ODA 계획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가능시 ADB와의 co-financing 사업 추진도 고려)

■ 한편, 주재국 정부가 금년도에 각종 규정을 많이 정비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해와 전문성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주재국 정부의 각 규정의 이행 지침 작성 과정시 원조공여국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상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동 과정에서의 우리측 적극 참여 필요)

- 특히 일부 공여국들은 새로 제정된 ODA 활용에 대한 Decree 131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하나, 지방정부 · 일선 행정기관 등 실제 ODA 사업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 우리는「중부지역 병원건립사업」등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으므로 동 법률 시행으로 인한 정책변화 및 개별 사업에의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Ⅱ. 의제별 세부 논의내용

1. 개회식

■ 개회식에는 주재국의 Nguyen Tan Dung 총리, Vo Hong Phuc 기획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5개부처 장관, Klaus Rohland Worldbank 베트남 Country Director 등이 참석함.

- 폐회식에는 Pham Gia Khiem 부총리겸 외교장관이 참석

■ Nguyen Tan Dung 총리는 개막연설을 통해 베트남은 올해 WTO에 가입하였고,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당초 목표했던 7.5%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05년 22%에 이르던 빈곤율을 19%까지 감소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설명하고, 이는 도이모이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혁의 결과라고 평가함.

- 또한 2006~2010 SEDP가 마무리되는

2010년도에는 1인당 GDP 1,100USD를 달성하고 2020년도에는 명실상부한 「공업 국가」(Industrialized Country)로 발돋움한다는 경제개발 목표를 소개

-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등의 과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 및 지지를 당부

2. 경제 성장과 기업환경

가. 베측 설명요지

■ 베측은 1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01~2005)의 결과 베트남 경제가 동기간중 연평균 7.5%의 GDP 성장 및 750만명의 고용창출 등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공기업민영화, 빈곤계층 감소 등 경제의 질적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음.

■ 2차 사회경제개발계획 이행을 통해 2006~2010년간 1인당 GDP 1,100불 달성, 빈곤인구 10% 감소, 도시지역 청정수 공급률 확대(95%) 등 경제 및 사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할 계획임을 소개함.

■ 또한 재무부, 교통부,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 금융 · 은행 · 공기업 등 분야별 개혁계획 및 베트남의 인적자원 개발 계획을 발표함.

나. 주요 토의 내용

■ 대다수 공여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지난 5년간 베트남의 경제적 성과는 베트남 정부 및 민간의 개혁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부패 척결 등 행정개혁 및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배양, 사법부 독립, 소수자 보호, HIV/AIDS 대책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

■ 또한 2006년 베트남의 WTO 가입, APEC 정상회의 개최, UN 안정보장 이사회 가입 등은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 특히 WTO 가입은 베트남 경제에 큰 기회와 함께 시장 경제 확립이라는 과제를 주고 있는바 WTO 가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입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입조건 이행이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함.

■ 우리 대표는 발언을 통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경험이 베트남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유용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출신용의 공급이 필수적인바 한국은 2005년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베트남 개발은행의 설립에 기여한 바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 동 은행을 통행 베트남내 수출신용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3. 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

가. 베측 설명요지

■ 베측은 경제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이 베트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HIV/AIDS 확산방지, 사회 안전망 구축, 자연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베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이들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특히, 베측은 이들 사회적 과제 수행을 위해 HIV/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사회보험제도 도입 등 법적 · 제도적 기반 구축이 진행중임을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

■ 아울러, 2005년 11월이후 국내에서 새로운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사례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UN, WB, EU 및 베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National Work Plan이 진행중임을 소개함.

나. 주요 토의내용

■ 대다수의 공여국들은 경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성장의 질 및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성장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함.

- 특히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대표는 빈곤층이 많은 산간지역 및 소수민족(Ethnic minority)에 대한 베측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소수민족 전통문화의 보존은 사회의 활력 유지를 위해 중요함을 언급

■ 아울러 UN Resident Coordinator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공행정과 환경 및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향후 ODA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임을 언급함.

■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건강한 노동력의 확보는 경제발전의 필수요소이므로, 향후 HIV/AIDS 확산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임을 소개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조함.

■ 우리 대표는 지난 6월 중간연도 원조공여국 회의시 SEDP의 세 축(three pillars)중 하나인 환경분야에 대한 2006-2010간 투자비중이 작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후 베측 정부가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증대 및 환경기금 설립 등 재원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함.

- 또한, 베측은 환경보호측면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환경산업의 증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어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각국과의 환경기술에 대한 지원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우리 대표는 지난 11월 한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베측에 동건 관련 설명을 직접하는 등 양국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 동건 발생관련 베측을 비롯한 관련국가와 상세한 정보교환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임을 설명

4. 법적 · 제도적 기반 구축

가. 베측 설명요지

■ 베측은 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반부패법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함으로써 그간 공여국들이 민간차원의 경제활동 및 ODA의 효과적 집행의 주요한 저해요인으로 지적해 온 부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언급함.

■ 아울러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2006-2010년간 2단계 공공행정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나갈 것임을 밝힘.

나. 주요 토의내용

■ 대다수 공여국들은 부패 척결을 위한 베정부의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지방정부의 지나친 관료주의(red tape), 상-하위 기관간 서로 다른 법률 해석,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함.

■ 아울러, 캐나다,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향후 베트남의 성패는 법치주의(rule of law)에 있음을 강조하고, 인권 보호,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등을 위해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베측의 노력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5.국제적 · 지역적 통합

가. 베측 설명요지

■ 베측은 지난 11월 11년에 걸친 협상끝에 150

번째 WTO 가입국이 되었음을 소개하고, WTO 가입 공약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WTO 가입공약 이행을 위한 기술적 원조 프로그램을 영국과 호주의 지원하에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함.

■ 아울러 지난 11.12-19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을 통해 투자 및 무역 자유화 촉진을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APEC은 회원국간 경제적 기술적 협력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 약속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소개함.

나. 주요 토의내용

■ 참가자들은 베트남의 WTO 가입 및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축하하는 한편, 이번 WTO 가입은 베트남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또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IMF를 비롯 많은 참가자들은 WTO 가입으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조정능력 강화, 그간 보호무역의 특혜를 누리던 산업영역의 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 개선, 공기업 민영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WTO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 아울러 국제 NGO는 WTO 가입으로 인해 일부 빈곤층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WTO 가입공약 이행에 있어서 베정부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언급함.

■ 우리측은 2006년도에 베트남의 WTO가입 및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베트남의 WTO 가입관련 협상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적극 개입, 지지하였음을 강조함.

- 또한 우리나라는 작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부산 APEC 개최이후 SOM의장실 및 준비기획단의 방베를 통해 경험을 전수하였으며 또한 경호 측면에서의 물적지원과 합동교육 등을 실시하여 2006 하노이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언급함.
- 한편, 금년도 APEC 개최시 작년도 Busan Roadmap의 이행을 위한 Hanoi Action Plan의 채택과 관련하여 베측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금번 회의시 주요 성과물중의 하나인 Stand-Alone Statement on WTO DDA의 채택을 주도하였다고 설명
- 한편, APEC 계기 한·베 정상회담시 우리나라 무상원조 역사상 최대규모(3,500만불)인 베트남 중부지역 병원건립사업에 대한 시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베측의 협조를 당부

6. 원조의 조화, 집행, 효율성 제고

가. 베측 설명요지

■ 베측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ODA 동원, 관리, 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여국들의 ODA 지원공약대비 집행비율도 개선되고 있음을 소개함.

- 정책 측면에서 MPI는 사회경제개발5개년계획(2006-2010)의 이행을 실현할 ODA 재원동원의 기초가 될 「2006-2010 ODA 전략프레임워크」를 작성하여 총리실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
- 법률 · 제도 측면에서는 Decree 131을 발표하여 ODA 관리 및 활용 관련 사업의 집행 가속화를 위한 권한의 이양, 절차간소화 및 원조조화, 타 법률과의 일관성 제고,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등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
- 특정 보고서 형식 및 체계, 조달절차 등에서 공여국(기관)과의 조화를 달성하고, 웹사이트(http://dad.mpi.gov.vn)를 통해 50개국 이상의 공여국간 개발원조데이터베이스(DAD)를 공유하는 등 원조조화를 위한 지속적 활동 수행 및 그에 따른 성과를 거양
- 지난 3년간 공여국, 국제NGO, 베트남 정부기간이 폭넓게 참여한 원조효과 관련 파트너쉽 그룹(PGAE)의 활동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ODA 효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Hanoi Core Statement를 채택하고 이행함으로써 베트남을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행한 국가로 만듬

■ 그러나 상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음.

- ODA 관리 및 활용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법률간 일관성 미흡
- line ministrys와 정부의 오너쉽 부족으로 질 낮은 사업계획서 작성
- 부적절한 원조제공방식의 선정으로 인한 자국내 재원조달 어려움 등 사업 준비 및 승인 지연
- 부지정리, 토지보상, 재정착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등

■ 2006년도의 ODA 동원 및 활용 평가결과를 기초로 2007년도에는 다음 조치내용을 중점적으로 이행 예정임.

- Decree 131과 관련한 사업추진반(PMU)의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이행지침 마련, 2006-2010 ODA 전략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과 하노이핵심성명의 이행계획 수립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보고,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수립

- 공여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조절차의 조화과정을 가속화
- 모든 수준에서의 ODA 관리 및 이행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등

나. 주요 토의내용

■ 대다수의 공여국 및 국제NGO들은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과 모범적인 수원태세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원조효과 관련 파리선언을 현지화한 Hanoi Core Statement(HCS)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행노력과 금번 Decree 131 제정을 크게 환영함.

■ 한편, Decree 131의 성공적인 이행 및 원조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line ministrys와 지방(성) 정부 및 집행기관의 능력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승인, 국제협정 체결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노력과 법률적 정비뿐만 아니라 사업관계자들의 의식변화도 긴요함을 설명함.

■ 스웨덴, 카나다, EC , 호주 등은 원조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여국의 원조절차 및 방식을 베트남 정부의 절차와 시스템에 조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 노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함.

■ ADB, UN 등은 원조비용에 대한 기준(cost norm) 관련, 사업지연시 계획단계와 집행단계에서의 원조비용의 차이 발생, 시장가격과의 차이(gap)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

■ 한편, 일본은 2008년 JICA와 JBIC의 통합을 통해 유·무상사업간 시너지 효과 및 원조효과 제고 계획을 설명함.

7. 각국 및 국제기구의 2007년 대 베트남 지원약속

■ 2007년도 대 베트남 지원서약(pledge) 총액은 44.5억불로 전년 약속액(37.5억불) 대비 약 7억불 증가함.

■ 일본(8.9억불), 프랑스(3.7억불), 한국(1.1억불)등이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그 외 ADB(11.4억불), WB(8.9억불), UN 기구(0.7억불), NGO(1.8억불) 등 국제기구/단체도 지속적인 대 베트남 지원을 서약

■ 우리 대표는 한국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SEDP와 연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개혁 및 금융제도 개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을 평가하고, 2007년에는 약 1.1억불의 유 · 무상원조를 지원할 계획임을 소개함.

[자료: 주베트남대사관]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s New Role in the 21st Century
(21세기 국제개발원조와 한국의 역할)

Seoul, September 21-22, 2006

KOREA AND THE OECD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Korea's Accession to the OECD

Presentation by
Michael Roeskau /Director,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Introduction

Previous speakers have already aptly demonstrated Korea's remarkable development and progress over the course of its 10 years of OECD Membership.

With this speech, I would like to turn the focus to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As other areas where the OECD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setter, Korean assistance has undergone an impressive evolution since 1996. Moreover, Korea has ambitious plans for its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 for the years to come. This reflects how Korea embracesa new role as an increasingly important donor commensurate with its weight and

impact on the global economic scene in the 21st century.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olicy is also one of the key OECD areas of work. In spelling out the OECD acrony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it is evident that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re key principles upon which the organisation is built. This mandate is not limited to members of the organisation, but also includes non-members, as enshrined in the founding charter of the OECD. With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the OECD is home to the key forum of bilateral donors. Whereas all areas of the Organisation work increasingly with non-Members, the DAC is the principal body through which the OECD addresses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Korea is one of eight countries, most of whomjoined the Organisation after 1990, who do not participate as full members in this area of work. Yet both Korea's own development experience and its rapidly emerging role as a donor make its strong participation in a dialogue o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nd donor co-ordination a clear desideratum. The Korean government has indicated that it is envisaging DAC Membership around 2010. The DAC covers a key area of the organisation's work and expertise, and Korea's full participation would complete Korea's OECD Membership, promising substantial further benefit to Korea, the organisation, and ultimately developing partner countries.

In outlining some perspectives on Korea's new role in the 21st century in the area of development co-operation, I will proceed in three steps: 1) outlin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 as a developing and ODA recipient country, then 2) turning to the country's more recent role as a donor of official assistance, before 3) concluding with some thoughts and perspectives on Korea as part of the donor, or development co-operation,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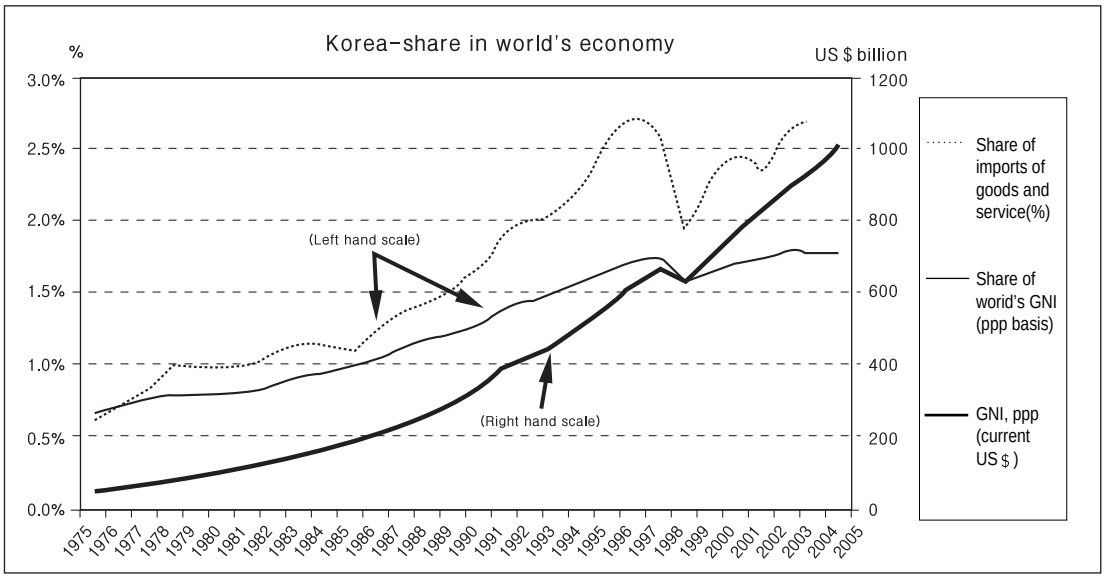
Korean development: a great success story also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he evolution of Korea as a donor is all the more impressive if seen against the background of its development since the mid-20th century. Suffering badly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country was devastated by the Korean War. When the country emerged from the war in 1953, it was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nd had to rely greatly on foreign assistance. Since then, however, the country has had a phenomenal growth record and it is now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see Chart 1 for the evolutionof Korean GNI and share in the world economy).

Korea was a recipient of ODA until 2000 and of OA (Official Assistance) until 2004. This is an indication of the positive impact that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have on nationaldevelopment when used systematically tocomplemen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a recipient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the aid was channelled into building capacity, and notably in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which became a key factor and condition for sustained and rapid further development.

Ch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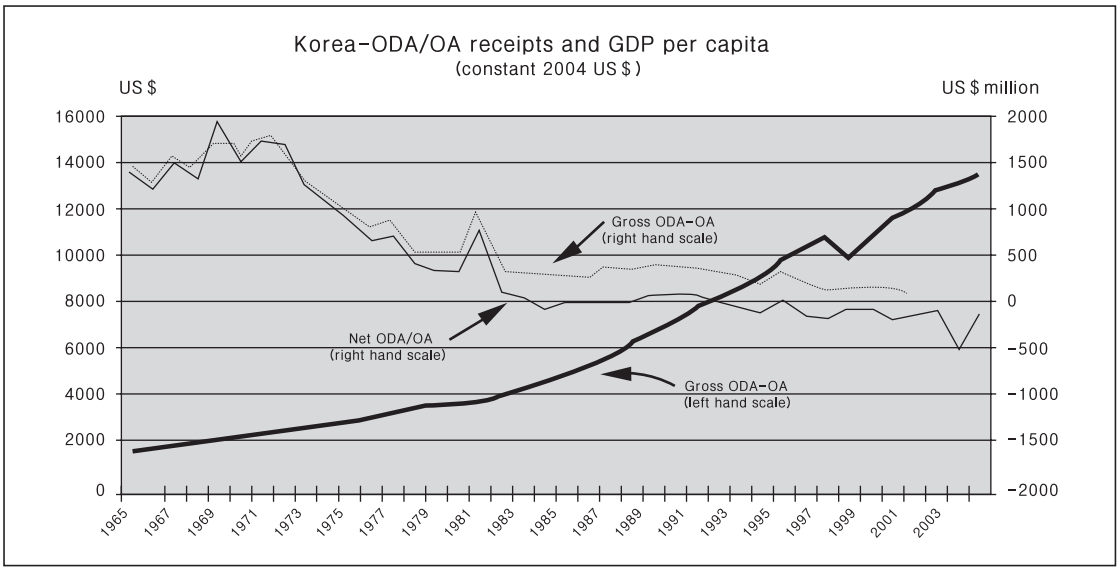


The next Chart (Chart 2) provides a graphical illustration of the evolution of ODA receipts and per capita GNI in Korea. With the equivalent of USD 1.3 billion (all figures constant 2004 terms) in 1960, total gross ODA to Korea accounted for about 6 per cent of GDP.

Notwithstanding considerable year-on-year fluctuations, this ratio declined quickly wi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In 1965, the equivalent of USD 1.37 billion represented slightly below 4 per cent of Korean GDP. By 1970, the share had declined to 2.5 percent despite an increase of gross ODA to USD 1.54 billion. It kept falling further in subsequent years, so that 1975 was the last year in which gross ODA, at USD 970 million, exceeded 1 per cent of Korean GDP.

After peaking in 1971, absolute amounts of gross assistance to Korea did show a clear downward trend,albeit amid significant year-on-year fluctuations. Net receipts of ODA declined even more quickly, as Korea's swiftly improving autonomous development capacity increasingly allowed early repayment of concessional development financing.

Chart 2



Korea as a donor a new role in the 21st century

Already in the late 1970s, Korea started its first donor activities, although these were scattered across different ministries and agencies and did not take the form of an integrated

programme. In 1984, net receipts of ODA were negative for the first time. The year of its accession to the OECD, 1996, was the last time Korea recorded positive net receipts of aid.

Korea's donorship has drawn much of its impetus and rationale from the country's unique development experience. The donor activity started in 1977, well before accession to the OECD, and when Korea was a developing country on the way to upper middle income levels. This process in itself constitutes a precious asset. Sharing the knowledge gained throughout it not least including an understanding how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a valuable component for successful development holds enormous benefit and practical inspiration for other, lower income developing countries.

Parallel to the domestic development aspect, Korean donorship can also be seen in the light of a changing global context. While over the past decade, the phenomenon of 'Globalisation' brought an unparalleled pace of transformation to the world, Korea's rapid development mightbe referred to as one of the early outriders of globalisation and a process thatimplied a growing stakeholdership of Korea in the world. To make globalisation an ultimately successful and sustainable process, it needs to be balanced and inclusive. A strong commitment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MDGs will be a key element for achieving this, by helping other developing countries to integrate into and realise the benefits of an ever more interconnected world.

Korea's early donorship focused on training and knowledge transfer, before an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was established in 1987 to provide concessional loan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Export-Import Bank. This was followed in 1991 with the establishment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which allowed a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d aid programme.

The basic structure of Korea's aid programme remains unchanged until today. Grant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are delivered by KOICA under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soft loans are delivered by EXIMBANK'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is puts Korea into a group with DAC members such as France, Germany or Japan, who have taken the same division of labour along institutional lines. However, the majority of DAC Members now tends towards virtually exclusive grant aid, and the question of 'grants versus loans' is the subject of an ongoing debate on the appropriateness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different aid modalities.

However,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has seen a tremendous evolution since. During his recent visit to Seoul in May 2006, Richard Manning, the Chair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was impressed by the political profile and energy, as well as the strategic approach of Korea's increasing role as a donor. The attention this issue receive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is reflected by the recent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on ODA Strategy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1] This comprises representatives of the 15 Ministries with a stake in Korea's ODA, as well as representatives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ademia and business, with attendance also from KOICA and EXIMBANK.

This focused approach to enhancing the framework and co-ordination for ODA policy is mirrored on the quantitative side by the growth of Korean ODA volumes vice versa the increasing aid volumes indeed reinforce the need for a strategic framework and policy for effective aid management. From 1991, the year of KOICA's creation, to 1996, when Korea acceded to the OECD, Korean ODA more than doubled from USD 64 million[2] to USD 140 million. Since then, Korea's ODA has increased more than fourfold to USD 665 million in 2005, equivalent to 0.09% of GNI[3] In current terms, Korea is already a larger net donor than five DAC Members. But Korea is gearing up for further increases with a tentative target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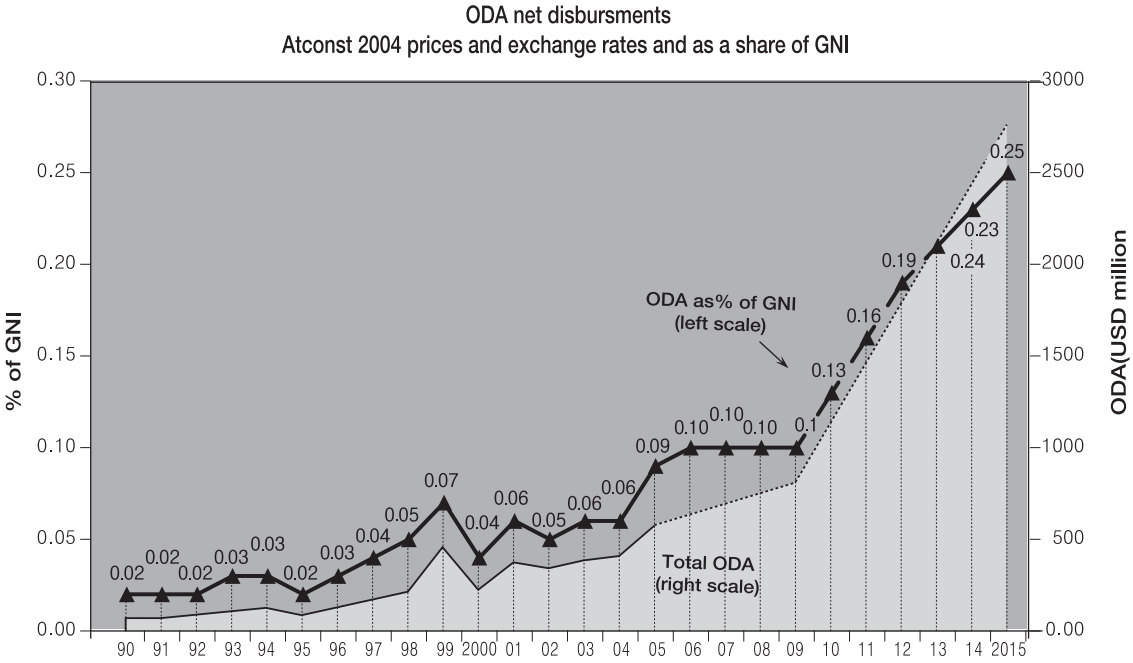
1) In addition to meeting at Prime ministerial level, the committee also meets at working level. Its secretariat is provided by the Ministry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 All figures are given in constant 2004 USD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figures do not include aid to North Korea. Whereas this would be ODA eligible in principle, it is not reported by Korea as ODA and handled by the separate Ministry of Unification, as an intra-Korea transfer..

3) In current dollars, total ODA amounted to USD 743 million (preliminary data).

reach 0.1% of GNI by 2009 and 0.25% by 2015. If realised, this will imply an estimated programme of around USD 2.8 billion by 2015, as illustrated in Chart 3[4]. The size of its ODA programme would make Korea the world's 14th largest donor.[5]

Chart 3



Scaling up ODA with benchmarks until 2015 is the first point of a five point strategy to enhance Korea's role as a donor and the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its aid. Creating an original Korean development assistance model distinguished from that of more advanced donors is the second strategic point. This aims to adapt Korea's unique development experience and comparative advantages to the needs of its partner countries. The basis for this will be their poverty reduction strategy, and, at a fundamental l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 further emphasis is placed on promoting democratic values and human security. The third element relates to an improved aid management system, with enhanced

4) On the basis of projected GNI growth of 5.2% in 2006 and 5.3% in 2007, and assuming subsequent GNI growth of 4.5% per year.

5) This very tentative estimate is based on existing commitments and on projections of more moderate economic growth than Korea's (2% per annum).

partner consultations with individual partner countries. Programme-based approaches will be implemented on the basis of mid-term country plans, making individual country engagement more predictable and strategically integrated. In this process, the question of strategic partner country selection will also be addressed. In the past, Korean aid has tended to be geographically scattered, with the bulk going to Asian countries (see Table 1). The new approach, however, will introduce a strategic focus on core partner countries or regions of each continent, including a stronger engagement in Africa.[6] Notably, the share of Korean ai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ub-Saharan Africa, the region with the highest density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will be scaled up. In 2004, LDCs and Sub Saharan Africa received shares of 19 per cent and 14.4 per cent of Korean ODA, respectively, compared to a DAC average for that year of 35 per cent and 32.4 per cent.[7] A systematic development education effort to raise public awareness and support for Korea's donor policies constitutes the 4thpoint, complemented by the intention to strengthen networks with NGOs, including as partial implementers of Korean ODA, as the final aspect of the strategy.

This is an impressive agenda by any standard. Its realisation will take time and enhanced capacity in the Ministry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s well as in the key operating Ministries. However, with continued support beyond the government from partie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from a strong NGO sector, and with a population that is increasingly international in outlook, it looks decidedly feasible and throughout the last decades Korea has often proven its ability to move decisively at national level.

Korea and the donor community

Korea is considered an emerging donor and its development assistance is still undergoing an ambitious and far-reaching transformation process, as I just ountlined. But it has long

6) President Roh Moo-hyun recently announced a tripling of Korean aid to Africa to $100 million by 2008.

7) See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5, Statistical Annex, tables 29 and 31 (http://www.oecd.org/document/35/0,2340,en_2649_33721_36052835_1_1_1_1,00.html).

assumed a place in the donor community even if so far a less integrated one than 'advanced' donor countries. Korea can indeed be seen as a role model, not only by other OECD countries who are not members of the DAC, but beyond that for other emerging donors in its region and at a global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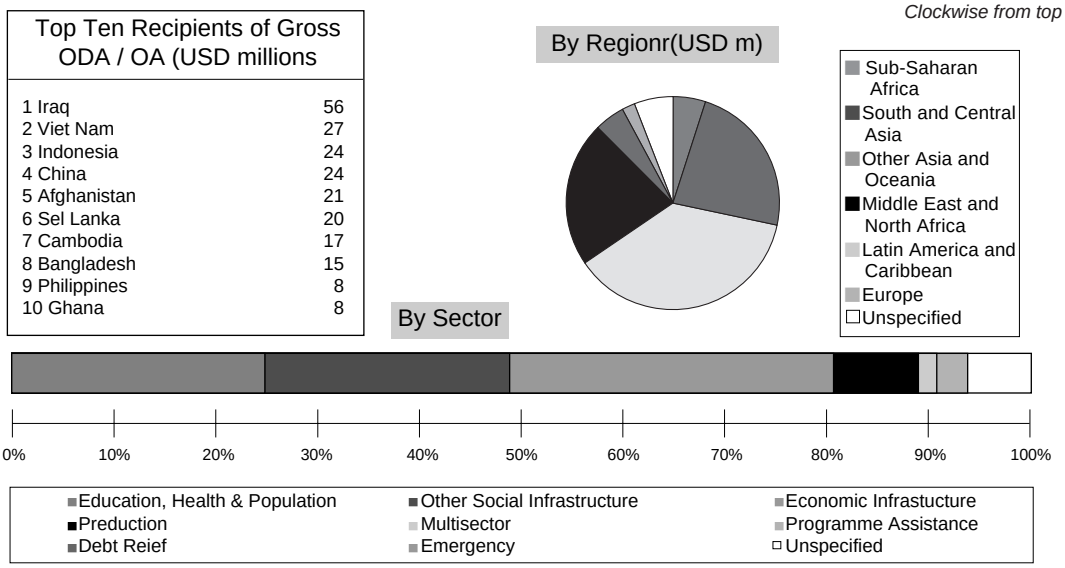
As an emerging donor, Korea has stated and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enhancing its engagement in the donor community, and to share in co-ordination and dialogue processes.[8] This engagement is important not only in light of the changing aid architecture and globally scaled-up aid. It also forms the basis for evolving approaches to and good practi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able 1

Korea ODA-geographical and sectoral distribution at glance

Gross Bilateral ODA, 2003-04 average, unless otherwise show
Clockwise from top

Top Ten Recipients of Gross ODA / OA (USD millions	
1 Iraq	56
2 Viet Nam	27
3 Indonesia	24
4 China	24
5 Afghanistan	21
6 Sel Lanka	20
7 Cambodia	17
8 Bangladesh	15
9 Philippines	8
10 Ghana	8



8) For the first time ever, Korea participated with a ministerial level delegation at the DAC High Level meeting in April 2006. Korea also participated and was among the lead speakers at the conference in Moscow on "Emerging Donors in the Global Development Community" in April 2006,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Russian G8 Presidency (Outcome document at: http://www.g8finance.ru/doc_eng.htm).

The fundamental motivation of the dialogue among donors, and increasingly including partner countries, is to make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at a global as well as individual donor level. With the Paris Declaration of March 2005, a practical, action-orientated roadmap was laid down to improve the quality of aid and its impact on development. The declaration is built on five principles: (1) partner-country ownership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cesses, (2) alignment of donors behind those strategies, (3) harmonisation of donor practices, and (4) mutual accountability of recipients and donors in (5) managing for results. Twelve indicators were established by the Declaration that monitor progress on its implementation.[9)]

Korea is one of currently 101 countries that have signed up to the Paris Declaration. Completing the agenda set out by the declaration will be ambitious for any signatory, donor or partner country. The discussion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objectives set for the its programme show an awareness of and work on the challenges of its implementation.

Overall, the 12 indicators and 56 commitments of the Paris Declaration aim to support sustainable progress and capacity development. This means that the yardstick for success should not be visibility of assistance. This has been for a long time a widely applied default approach, but is mistaken. Instead, the yardstick need to be development impact and progress. Korea's present programme is still very much project-based, including many small institutional projects with a strong "Korean friendship" label. Howev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its aid, Korea will need to adapt this approach, as its aid continues to grow, and as the country evolves into a more significant donor in several target sectors or countries.

Another lesson of the past for DAC donors has been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basis of enlightened self-interest rather than more narrow perspectives of national interest eventually produce greater mutual benefit to recipients and donors. The tying status of aid is

9) See http://www.oecd.org/dac/effectiveness/parisdeclaration.

an example of this. In 2004, USD 81 million, representing 19 per cent of Korean ODA, went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It is estimated that almost of this has been tied. A common reflex of emerging donors to tie aid is understandable, especially after it has taken the DAC 40 years to agree on a common position. It does not, however, change the reasons and evidence why tied aid is often problematic. Extensive analyses have found the tying of assistance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price (on average 25%) of goods and services procured. Increasedadministrative burdens and the risk of biasing aid towards inappropriate technology are other important concerns related to tied aid. Acknowledging the problems associated to tied aid, DAC Members agreed in 2001 the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10]

Tied aid also carries the risk of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partner country ownership, and their accountability for the development process. This is especially true in countries with very limited capacities. This takes us back to the condition sine qua nonfor sustainable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 country ownership of the development process. Only if developing countries are in the driving seat are they in a position to manage for results and assume proper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this process. A supply driven approach to co-operation sets the wrong incentives. To be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must be demand driven.

The way in which Korea pursues an enhanced donor capacity in a very strategic and systematic manner, are a testimony to the fact that these points have come to be well appreciated. Indeed, many of them are addressed by the five-point strategy referred to above.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indicated it is consideringa comprehensive set of ideas for implementation in the medium term. This includes new legislation, harmonisation of the various aid schemes, promoting a gradual move towards untying, regulating emergency relief, developing human resources, strengthening the 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apacity,

10) See http://webdomino1.oecd.org/comnet/dcd/untiedpubliccws.nsf/ for detailed assessments of aid untying.

including through a new research centre for ODA and regional studies o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increasing the involvement of Korean NGOs.

There is no question that Korea may still be an emerging, but already is a sophisticated and strategically managed donor. The country already meets key criteria of DAC Membership with regard to volume, the existence of a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id delivery, and the provision of statistics on its ODA programme. Korea is now in a position to contribute to as well as learn from the pool of experience of DAC members. In view of this, an official position of moving towards DAC Membership by about 2010 as referred to above may appear rather cautious. However, the period until then already offers the opportunity for Korea to enhance its engagement in the donor dialogue facilitated by the DAC.

Its ten years of OECD Membership have constituted a decade of mutual benefit to Korea and the Organisation. Korea's donor capacity increasingly reflects its growing profile and stakeholdership in the world. This implies that the scope for further benefit from participating in the OECD's dialogue on development assistanc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Let me therefore conclude with the strong hope that, at the next 10-year anniversary conference of Korea's OECD accession, a retrospect will include many years of full membership in the DAC.

한-아프리카 포럼 서울 선언문

■ 2006.11.7-9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의 참석자들은 동 포럼이 한국과 아프리카간 우호 관계와 파트너쉽, 그리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 참석자들은 오늘날 급속한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장 및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역동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이 지역간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 참석자들은 21세기 국제관계의 근본적 가치로서의 연대성(solidarity)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00년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개발협력 동반자(partner)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 목표 달성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이러한 의미에서,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와 더불어 2008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3배로 확대하는 등 원조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높이 평가한다.

또한 향후 3년간 1,000명의 연수생을 초청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아프리카와 개발경험을 공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감소를 포함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NEPAD)' 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가 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자원, 농업, 보건,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선정(good governance) 등 주요분야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환영한다.

참석자들은 또한 이러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아프리카의 개발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 참석자들은 한국과 아프리카간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석자들은 한-아프리카 포럼이 앞으로 양측간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관계 강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 참석자들은 '한-아프리카 포럼'을 실질적 협력의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서울
2006, 11. 8일

Seoul Declaration on the Korea-Africa Forum

November 2006

■ We, the participants of "The 1st Korea-Africa Forum" held in Seoul on 7 to 9 November 2006, acknowledge that the Forum laid the foundation for a framework of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African countries.

■ We recognize that the African countries, equipped with the potential for full growth and development, and dynamic Korea need to bolster inter-regional cooperation as a way to respond to the fast-changing global environment, including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of nations in this rapidly globalizing world.

■ Having in mind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as a fundamental value to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adopted in 2000 and call on all the development partners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efforts of the African countries in achieving their goals.

■ In this context, we highly appreciate "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 declared by President Roh Moo-hyun during his visit to African countries in March 2006 and the Korean Government's announcement to increase its aid budget including the

tripling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African countries by 2008.

We welcome the Korean Government's commitment to assist the African countrie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inviting 1,000 trainees within the following three years and share its development experience with Africa.

■ We also welcome the Korean Government's commitment to provide full support for the African countries in pursuing objectives of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such as poverty reduction, and in addressing problems in key priority areas including water, agriculture, health,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CT, and good governance.

We also recognize that collaborative programs should proceed from Africa's own initiative for its development, along with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partners such as Korea.

■ We acknowledge the need to establish long-term and mutually-beneficial relationship by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Africa.

■ We also acknowledge that the Korea-Africa Forum will not only establish a close economic partnership but also play a vital role in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mong people from various cultures and reaffirm our commitment to fostering closer ties in the areas of mutual interest.

■ We agreed that the Korea-Africa Forum should be held regularly to serve as a mechanism for substantive cooper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November 8, 2006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년 제4호

발 행	2006년 12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마스터-원 TEL.(02)2272-5002(代)